

2016 프로젝트
〈그날들〉

기억하는
우리,



멈추지
않는 인권



사건은 ‘그날’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경계다. 기록은 그 경계 지점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가리키는 지표가 된다. 인권운동은 1993년부터 ‘인권 10대뉴스’를 통해 연말마다 한국 인권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지표를 만들어왔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한국의 인권지형은 변화하였고 ‘인권’은 더욱 대중적인 말이 되었다. 하지만 구조적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인권’은 점점 껌데기만 남은 말이 되어갔다. 2013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 그날들>은 10대 뉴스만으로는 기록되지 않는 놓치지 말아야 할 인권의 장면들을 통해 한국 인권현실을 두루 헤아려보는 기록을 만들고자 했다.

2016년 굵직한 사건들이 연일 이어지며 주권자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른 지금도, 여전히 ‘그날’들은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고단한 삶과 권력의 추악함을 인권의 시선으로 살피고, 끊임없는 저항과 연대로 존엄을 회복시켜온 그날들을 인권의 이름으로 기록함으로써 공동의 기억을 만든다. 이 공동의 기억을 쌓는 일이야말로 인권운동의 역사이자 인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프로젝트 그날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수고로움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2016년도 <프로젝트 그날들> 역시 그 역사의 일부가 되길 바란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을 보태자면 2016년 12월에 발생한 그날들은 기록에 넣지 못했다. 연말 발표를 위해 전년도 12월부터 해당년도 11월로 기록 할 그날을 한정하기 때문이다. 어느 해나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2016년 12월이 담기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하지만 다 담지 못한 그날의 아쉬움은 내년을 기약하며 이 소책자가 2017년 인권의 지표로 다가가길 바란다.

2016년 12월 15일 프로젝트 <그날들> 기획단

차례

집회.시위의 복장까지 규제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복면금지법’에 따지를 걸다	8
<청소년과 세월호> 토론회, 청소년의 권리를 말하다	10
세월호 특조위 첫 청문회, 해경의 책임을 추궁했으나	12
밀양송전탑 반대투쟁 10년, 다시 길 위에서	14
주민등록번호 헌법불합치 결정	16
삼성전자 하청업체 청년 노동자, 메탄을 증독으로 실명	18
알바노동자 서울고용노동청 항의방문	20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고용노동부 지침 발표로 강행	21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학살의 흔적은 지워졌지만...	22
주민등록번호는 차별이다! 성별번호 삭제 및 임의번호 도입 요구한다!	24
서촌 임차상인 강제집행 저지 직접행동, 강제집행으로 빵집을 내쫓은 자리에는 다시 빵집이 들어왔다	26
서울역 7017 프로젝트 = 노숙인 out 프로젝트	28
의지 없는 노숙인등 종합계획	30
서울시 성소수자 단체에 공공시설 대관 불허, 평등권 침해!	31
“청소년 자립”밖에서 자립 찾기-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연구결과 발표	32
계속되는 의료민영화 시도	34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보고회,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야’	36
인권활동의 기록을 모으다. “인권 아카이브”	38
광화문에 유령이 나타났다! 엠네스티 유령집회	40
“애도는 죄가 아니다” 416 노란리본법률지원위원회 출범	42
국정원의 숙원 사업, 테러방지법 통과	44
20대 총선 후보 바로 알기 “막돼먹은 친구를 소개합니다”	46
성소수자 유권자 운동의 시작, 레인보우보트	48
“전환치료” 폭력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하다	50
세월호, 그날의 기록 출간	52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한광호를 죽였다	54
물고기들의 떼죽음, 알권리로 살아오다.	56
20대 총선, 차별 내리고 인권 올리고?	58

재벌특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특별법	60
정말 아동학대를 예방할 생각이 있기는 한가!	
각 정당 아동학대예방정책에 대한 답변 분석 결과 발표	62
청와대 인근 무더기 집회금지에 제동이 걸리다	64
“평화와 군사기지는 공존할 수 없다.”	66
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들의 이야기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출간	68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선포, 함께 행동하자	70
포기도 선부른 희망도 아닌, 그 사이를 진동하는 발달장애인 엄마들의 이야기, 『그래, 엄마야』 출간	72
안전할 권리, 화학물질 알권리 외친다! 한솔케미칼 노동자 백혈병 산재인정 촉구	74
최악의 환경 재해, 침묵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76
일터괴롭힘에 의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죽음	78
노역 살려간 노동자 알몸검신하는 구치소나 기각하는 인권위나 다름 바 없어	80
아시아 LGBT 부모모임 초청 포럼 ‘그래, 우리 같이’	82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시행 1년, 여전히 쫓겨나는 임차상인의 목소리	84
강남역 10번 출구를 뒤덮은 포스트잇, 한국의 여성혐오를 고발하다	86
혐오에 반대하는 무지개 물결,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88
옥바라지 골목의 마지막 여관, 강제집행 당하다	90
정보수사기관 무차별 통신자료수집	92
아버이연합 게이트, 보수단체에 집회를 사주한 국정원의 사주를 봐드립니다	94
3,000여 명의 시민들, 혐오와 차별을 선동한 기독교유당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96
국가인권위, 영터리 인권위법 개정으로 A등급 유지	98
“질병정보 노출, 에이즈 강제검사, 내무반 소독” 경찰청의 무능한 대응이 에이즈 공포를 강화시키다	100
법원의 동성커플 소송 각하,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102
더이상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지 말라! 남원평화의집 장애인폭행사건	104
<핑크워싱> 상영과 더불어 이스라엘에 대한 BDS운동을 선언하다	106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의 죽음	108
20대 쌍둥이 형제 사망 사건, 누가 또 송파 세모녀를 만드나	110
갈수록 높아지는 생리대 가격, 깔창 생리대의 비극	112
고공농성하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내려와	114
퀴어페미니스트의 목소리를 담다, 매거진 <뽕> 발간	116
미 올랜도 게이클럽 총격사건, 연대 추모문화제	118

혐오 돌려막기? 평등해야 안전하다	120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출근저지 투쟁 참가자 연행사건,	
최저임금1만원을 향한 알바들의 국회 앞 1만 시간 단식투쟁	122	집시법·업무방해 모두 무죄판결	184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 유엔에 알리다	124	어린이 책을 통해 본 어린이 인권, 『어린이 책 비밀의 독서』 출간	186
유엔에 한국의 여성폭력 문제를 알리다	126	317일간의 사투 끝에 백남기 농민 사망, “이제 싸움의 시작”	188
김관홍 잠수사의 죽음,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다	128	시설범죄로 얼룩진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 폐쇄	190
반월사회공단 노동자들, 권리를 말하다	130	15년간 다닌 병원에서 진료거부 당한 HIV/AIDS 감염인, 인권위 진정	19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안전에 대한 기업책임의 원칙을 묻다	132	불법 정부의 불법 성과. 퇴출제에 맞선 공공부문 총파업	194
에어컨 정비 노동자 추락사,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태롭다	134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1500일	196
최초의 성적소수자 인권재단, 비온뒤무지개재단의		경찰의 집회 채증사진의 증거능력 더 엄격하게 따져야!	198
법무부 법인설립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136	900일의 외침, 진실의 끝은 우리가 정한다	200
죽음의 물대포를 추방하라,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가습기 살균제 특별위원회, 해결해야 할 과제들만 확인	202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138	한국판 소도미범! 동성애 처벌법!	
장애인, 권리의 주제로 무대에 오르다! 2016 세계사회복지대회	140	균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선언운동	204
유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 신설	142	노숙인도 생활임금을!	206
20대 국회, 형제복지원특별법 재발의하다	144	반올림 노숙농성 1년, 이제 삼성이 답하라!	208
사드 한국 배치, 우리는 화약고에 살겠다고 결정한 적 없다	146	20년만에 열린 “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 도시 유엔회의”	210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2016년 파견노동포럼	148	병역거부 항소심 최초 무죄 판결	212
개돼지들이라 최저임금1만원은 아깝습니까?	150	낙태죄 폐지 운동, 검은 옷의 행렬로	214
동양시멘트 노동자들과 정규직 쟁취하러 “삼척으로 가드래요~”	152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한국반빈곤영화제 첫 개최	216
한상균을 석방하라! 민주주의 살려내자!	154	삼례 3인조, 17년만에 누명을 털어낸다.	218
“법대로”라는 말의 폭력, 쫓겨난 우장창창	156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아우성이 합성이 된 ‘조선 하청노동자 대행진’	220
장애인 혐오가 부른 일본 장애인거주시설 집단살인 사건	158	129명의 죽음, 대구시립희망원은 ‘조용한 학살’을 멈춰라!	222
노동자의 일상을 파괴한 갑을자본의 노조파괴	160	목숨을 건 단식과 자살기도까지 했던 오면씨를 법무부가 강제추방한 날	224
현재, 동성애 처벌법 합헌 선고	162	포기하지 않은 죄, ‘파산 콘서트’	226
단원과 기억교실 이전하던 날	164	세월호 인양, 거짓말의 연속	228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3권 쟁취!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166	박근혜는 하야하라! 거리를 메운 주권자의 함성	230
290여일의 싸움 끝에 받은 사과	168	사상 최장기 철도파업은 오늘날의 전태일정신	232
복지 사각지대의 주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안 발의	170	청소년이 바라는 세상: ‘청소년대통령’ 대국민담화문 발표	234
국가인권위원 인선절차 1년 소요	172	예비군 훈련 거부 선언 기자회견	236
청와대 앞에서 장애인 인권을 외치다	174		
국가인권위원회,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권고	176		
2016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KOREA 저항행동	178		
위험하다고 느낄 때 안전할 권리는 어디에 - 경주 지진 사태	180		
유해물질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다	182		

2015.12.2.

집회.시위의 복장까지 규제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복면금지법’에 탄지를 걸다

작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시위 참여자를 테러리스트와 비교하면서 “IS(이슬람국가)도 지금 얼굴을 감추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며 “복면 시위를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 직후 새누리당 의원들도 ‘복면금지법’을 발의하고, 시위대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수원지역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은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복장을 규제하려는 것 역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다양한 가면 및 복면 등을 착용하고 나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말도 안되는 시도를 조롱하였다. 그러나 2016년 9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복면착용’을 일반양형 인자에 포함하여 집회,시위 현장에서 “신원 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결정했다.



2015.12.3.

<청소년과 세월호> 토론회, 청소년의 권리를 말하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상당수는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이었다. 참사 이후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은 한국사회 교육의 현주소를 상징하는 말로 회자되었고 아울러 청소년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도 확산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청소년에 대한 과잉 보호주의나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지 않는 태도들 역시 많이 드러나기도 했다. <청소년과 세월호> 토론회는 이와 같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소년을 둘러싼 담론을 짚어보고 인권운동의 과제는 무엇인지 헤아려보는 시간이였다. 토론회를 거치며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도 했다. 이후 2016년 2월 15일 세월호청소년 토크콘서트 <응답하라 2014>를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서 청소년 토크콘서트 등의 자리가 이어진 것은 우리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청소년과 세월호> 토론회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어른의 미안함'을 넘어서
2015년 12월 3일 목요일 오후 3시 인권중심 사람



청소년 활동가가 보는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에서 그려졌던 청소년

발제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지정토론자 변 교육공동체 나다

대형참사를 겪은 10대의 경험과 삶

발제 이호연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
지정토론자 박성현 안산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지관 네트워크 우리함께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의 변화와 방향성 평가

발제 조영선 교사, 전교조 학생인권국장
지정토론자 이누리 무지개빛 정개구리, 중학교 3학년 학생

세월호 참사 이후, 청소년 인권이 필요한 이유

발제 미류 4.16연대 인권선언 제정특위
지정토론자 오지숙 4.16연대 공감위원회
김진곤 YMCA연맹 지도력개발국장

참가자들과 전체 토론



존엄과 안전에 관한



문의 010-9236-0367 혜원
02-2285-0416 4.16연대
www.416act.net

2015.12.14.

세월호 특조위 첫 청문회, 해경의 책임을 추궁했으나

수사권, 기소권 없이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이 특별조사위원회에 부여한 조사권한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청문회였다. 정부의 조사 방해로 활동의 어려움을 겪던 세월호 특조위는 가까스로 첫 청문회(2015.12.14.)를 열어 해경을 비롯한 구조 실패의 책임자들을 추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해경 지휘부는 하나같이 책임을 회피했고 주요 증인들의 불성실하고 오만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자아냈다. 이후 세월호 특조위는 특별법이 보장한 권한에 따라 국회에 특검임명 요청안(2016.2.19.)을 보냈다.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특검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6.28.)하였으나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

1차 청문회에 이어 두 번의 청문회가 더 열렸다. 2차 청문회(3.28~29.)는 청해진해운의 선내대기명령, 국정원 관련 의혹, 운항관리 과정의 각종 비리 등을 다루었다. 3차 청문회(9.1~2.)는 국가와 언론이 어떻게 참사를 왜곡하고 은폐했는지를 따져 물었고, 마지막 순서로 참고인과 방청객으로 있던 피해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마무리되었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의 권리이자 우리 모두의 권리다. 진실에 닿기 전까지 피해자들은 참사를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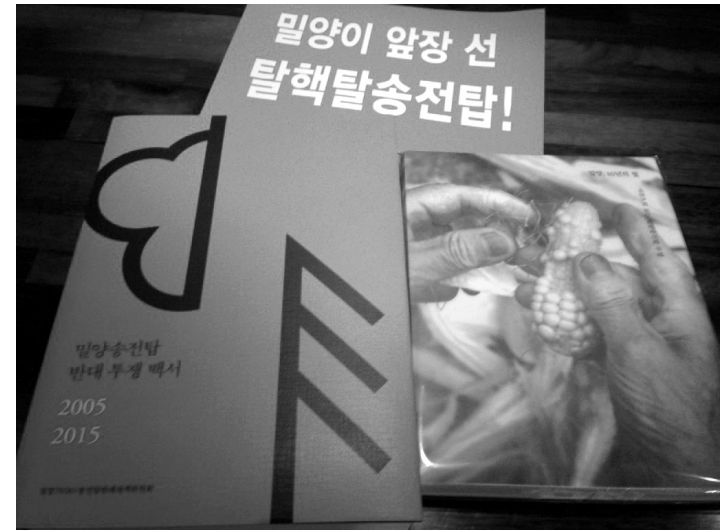
는 안전해질 수 없다. 청문회는 진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한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끝없는 방해로 세월호 특조위는 법이 보장한 청문회조차 열기 어려웠다. 재난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아프게 배우고 있다.



2015.12.17.

밀양송전탑 반대투쟁 10년, 다시 길 위에서

밀양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이 송전탑 반대 집회를 열었던 2005년 12월 5일 이후 밀양은 10년을 싸워왔다. 이미 2014년 765킬로볼트의 송전탑 69기가 사실상 완공되었으나 밀양 주민들은 멈추지 않았다. 주민들은 시즌2의 투쟁을 선언하며 송전탑 건설 예정지 주민과 연대했고 탈핵의 필요성을 알리는 원정대가 되어 전국 곳곳에서 함께 살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다. 투쟁 10년을 맞아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는 밀양투쟁백서와 사진화보집을 발간하는 기념회를 열었다. 국책사업의 실체를 드러내고, 국가의 무능과 폭력을, 그것에 굴하지 않는 밀양 사람들의 소중한 기록을 내어놓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응원했다. 국가폭력의 대명사였던 밀양은 이제 연대의 고유명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의 곁을 지키고 있다.



2015.12.23.

주민등록번호 헌법불합치 결정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입한 것은 1968년이다. 디지털 시대 들어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에서 국민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으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무적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 주민등록번호가 번호 안에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인권침해이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익명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여러 실명제 중) 포털 등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이 미뤄지는 동안 대규모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도용이 계속되었다. 2015년 12월 23일,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7년까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를 개선해야 했다. 그러나 2016년 5월 국회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면서 유출 피해자에게 변경을 허용했지만 새로 발급될 주민등록번호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라는 인권단체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2016.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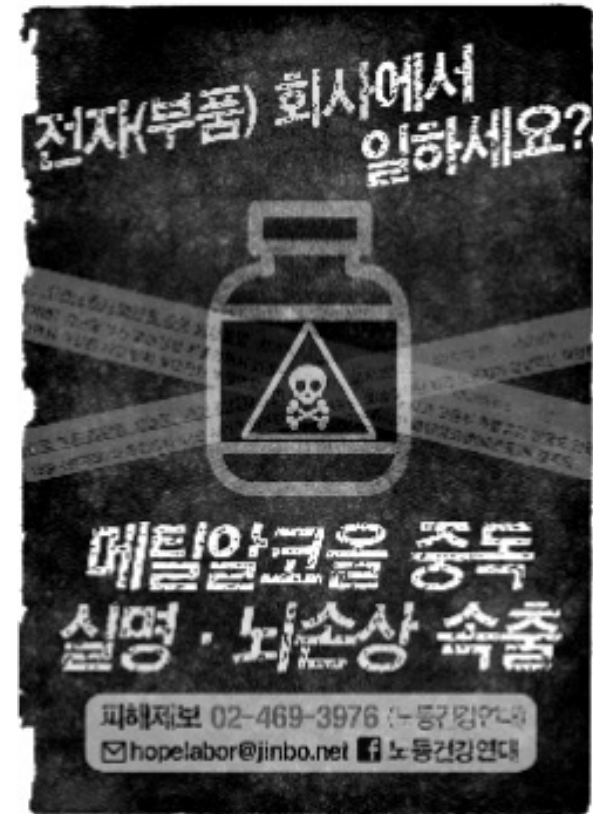
삼성전자 하청업체 청년 노동자,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

20대 삼성전자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 증세를 보였고, 이 중 4명이 시각을 잃었다. 그리고 지난 10월 12일 추가 피해자 2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이라며 추가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메탄올은 중독되면 중추신경 마비, 시각 손상 등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나 20대 파견 노동자들은 누구도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 보호구 역시 일회용 마스크가 전부였다. 또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검진을 받기 전까지는 왜 실명을 했는지조차 몰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안전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메탄올 취급업체 3,1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발표 후 추가 피해자 제보가 있으면서 노동부의 부실 관리 감독이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재벌 자본의 탐욕, 파견 노동자에 대한 무방비 상태의 안전보건 시스템,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노동자가 화학물질 정보조차 알지 못하는 현실 등 헬조선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2016.1.22.

알바노동자 서울고용노동청 항의방문

알바노조 조합원 100여명은 1월 22일 총회를 마치고 서울고용노동청을 항의 방문하였다.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일 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장을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반면, 알바노동자에게 체불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합의를 종용하고, 잘못된 노동법 안내, 느린 사건처리와 힘없는 알바노동자들에 대한 인격적 무시를 해왔다. 노조는 100건의 피해사례를 모아 서울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들어가 발표했다. 노동청 진입 30분 전인, 오후 3시 이기권장관이 노동법개악 양대지침(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쉬운 해고)을 발표했는데, 정권은 노동개악에 반대한 투쟁으로 보고 조합원 60명을 1시간도 안 되어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박정훈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016.1.22.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고용노동부 지침 발표로 강행

고용노동부가 두 개의 행정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포장으로 노동개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저성과자 해고’가 누구나 쉽게 해고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해 기업이 임금을 삭감하기 손쉽게 해주는 것이라 사회적 반대가 거셌다. 그러자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의 행정지침으로 기업에 무기를 쥐어준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전방위적 노동개악은 멈추지 않고 있다.

2016.1.23.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학살의 흔적은 지워졌지만...

“용산 학살의 진실이 밝혀질 때 이 땅은 죽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용산참사 현장의 공사장 펜스에, 낙서처럼 쓰여 있는 문구였다. 철거민들을 가혹하게 죽음으로 내몰았던 용산4구역 개발 사업은 참사 이후 주차장으로만 쓰이고 있었다. 7년 넘게 공터로 방치된 죽음의 땅에 2016년 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다.

용산참사 7주기를 맞아, 공사 재개로 흔적이 지워질 참사 현장에서 1월 23일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가 열렸다. 학살의 흔적이 화려한 주상복합 건물로 지워질지 모르지만 국가폭력의 그날을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짐했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미완의 숙제다. 20대 총선에서는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가 경주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용산참사는 현재진행형이다.



2016.1.27.

주민등록번호는 차별이다!
성별번호 삭제 및 임의번호 도입 요구한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생년월일, 성별 번호를 유지한채 나머지 번호에 대해서만 변경이 가능토록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도입 40여 년 만에 이루어질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을 앞두고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새로이 부여될 주민등록번호는 아무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로 발급하는 것이 정보인권에 부합할 뿐더러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에서 남성은 1, 여성은 2와 같은 식으로 성별을 표시해 온 국가 정책은, 여성을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특정한 성정체성을 강요하는 수많은 인권 침해로 양산해 왔다. 현재 국회에는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10월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개인정보 유출시 주민번호 뒤 6자리만 바꿀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6.1.29.

**서촌 임차상인 강제집행 저지 직접행동,
강제집행으로 빵집을 내쫓은 자리에는 다시 빵집이 들어왔다**

동네가 뜨면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꾸려나가는 사람들, 임차상인이다. 효자동에는 20여년 간 빵을 구운 작은 빵집과, 세탁소를 운영하며 억척스레 자식들을 키운 “사람들”이 있었다. 매일 열심히 장사만 하며 살았다. 하지만 동네가 뜨자 건물주는, “그냥 나가”라며 엄동설한에 강제집행을 자행했다. 이에 빵집과 세탁소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 모였다. 하지만 건물주가 동원한 용역들은 망치와 소화기를 들고 “공무집행”이라는 이름 아래 폭력을 가했다. 안에 사람들이 있다고 외쳤으나, 유리창을 깨며 강제집행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그 날의 강제집행은 건물주와의 합의로 일단락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지금, 건물주가 내쫓은 그 자리에는 결국 또다른 “빵집”이 들어왔다.



2016.2.1.

서울역 7017 프로젝트 = 노숙인 out 프로젝트

지금 서울역엔 오래된 고가도로를 공원화하는 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진전되는 공사만큼 거리 홈리스는 몸살을 앓고 있다. 공원 바로 밑에 위치할 노숙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을 하는 희망지원센터를 서울역 변두리로 이전해야 한다는 골치 아픈 이야기가 오갔다. 지난 4월에는 서울역 중앙지하도 내 노숙공간에 대해 냄새 등 불평 민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긴급히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하루 2회 물청소로 홈리스가 머물 시간을 단축시켰고,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라며 노숙인에게 주의를 요하는 안내벽보가 부착, 경찰의 보호(라지만 실질적으론 불심검문) 등의 불편한 조치가 진행되어 홈리스 사이에선 ‘서울역에서 노숙할 수 없다. 어찌지?’라는 암묵적인 불안감이 조성되었다. 이에 질세라 서울역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에 ‘노숙인 접근금지!’란 커다란 글귀를 붙여놓기도 하였다. 지하통로에선 “여기 있으면 안돼요! 밖으로 나가!”란 지하철보안관과 역무원의 겁박도 더해져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빌미로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한꺼번에 홈리스를 괴롭혔다. 이번 공원화 사업이 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서울역과 그 주변부를 더욱 세련된 도시로 만드는데 일

조하겠지만, 보호가 필요한 홈리스에 대한 부정적 단속과 공공장소라는 안전한 곳에 머물 수 없도록 내몰아내는 퇴거라고 여겨지는 것이 과장된 표현이 아닌 것이다. 이미 홈리스도 시민이라 하던 서울시노숙인권리장전은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니..

2016.2.3.

의지 없는 노숙인등 종합계획

지난 2월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012.06시행)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노숙인 등의 보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나 법 시행 5년이 되어서야 겨우, 실태조사 없이 껍데기로 만들었다. 우선 ‘노숙인 등’의 대상인 쪽방·고시원·여관여인숙 등 거주자 22만 명을 쫓 빼놓고, 거리와 시설노숙인 12,300명으로 대상을 축소한 것이다. 게다가 구체적 계획실행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재정계획조차 통째로 누락했다. 맵소사! 종합계획을 만드는 과정도 비공개, 폐쇄적이라 직접 현장설명회를 통해 참여한 홈리스들의 요구를 모아 복지부에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처럼 부실한 종합계획은 결국 홈리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고, 진정성 있는 지원도 불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5년을 어떻게 버티나. 이제라도 개선의지를 보이는 종합계획으로 재수립되길 바랄뿐이다.

2016.2.15.

서울시 성소수자 단체에 공공시설 대관 불허, 평등권 침해!

2월 15일 서울시 인권보호관은 서울시 산하 청소년수련관이 성소수자 단체의 시설 사용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하였다. 지난 해 11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정기총회를 위해 수련관 내 시설 대관을 신청했으나 수련관 측은 내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관이 불가하다고 통보했고, 친구사이는 이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인권센터에 사건을 신청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결과, 이 수련관은 지난해 모 연구소 등 5개 외부 기관에 대강당을 여러 차례 빌려준 사실이 있고, 친구사이가 대관 신청했던 날짜에 수련관을 직접 방문하였을 때, 대강당 문은 잠긴 채 내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시하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시설의 재화와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았다.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권은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해당 기관이 청소년 관련 시설이라 할지라도 동성애자들에게 시설 접근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행위다. 올해도 친구사이는 이 청소년수련관에 대관 신청을 했고, 이 공간에서 총회는 열릴 예정이다.

2016.2.16.

“청소년 자립”밖에서 자립 찾기-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연구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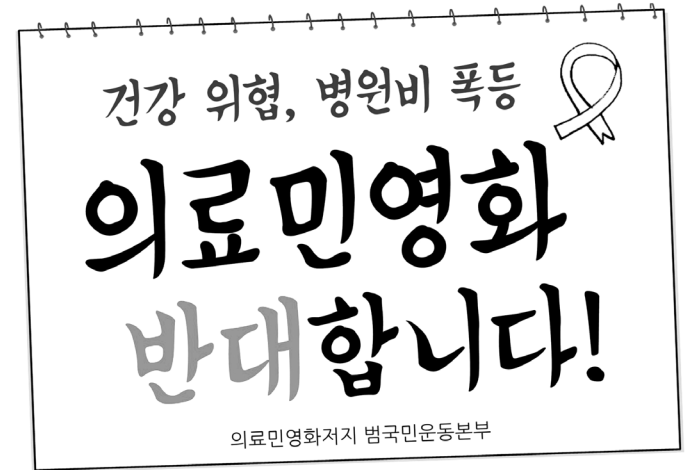
‘2015 위기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의 모니터링팀으로 한 해 동안 현장의 활동가/실무자들과 청소년들을 만나며 고민한 결과물을 나누는 자리였다. 청소년 자립과 관련한 기존의 담론, 제도, 실천들은 대개 ‘청소년은 미성숙하며, 일방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주류적 인식에 머물러있고, 정착 지원의 주체여야 할 청소년들이 자립 ‘시켜야 할’ 대상으로 위치되곤 한다. 삭막하고 두려움 가득한 자립의 언어에 인권의 숨결을 불어넣는 작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현장에, 그리고 사회에 의미 있게 전해지기를 기대한 연구였고, 자립지원현장과 청소년인권이 어떻게 만날지 문제의식을 관련 실무자, 연구자, 활동가 등과 나누고자 했다. 관련 자료집은 ‘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16.2.17.

계속되는 의료민영화 시도

박근혜 정부는 2016년에도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꾸준히 내놓았다. 2월 17일에는 9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민간 중심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중심 건강관리서비스는 개인 건강정보가 보험회사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기기 비용 때문에 건강불평등을 낳을 소지가 크다. 4월 29일에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투쟁으로 법사위에서 폐기시켰다. 병원 인수합병이 가능해지면 병원노동자 구조조정의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우회형 영리병원’인 영리자회사 정책과 결합할 경우 한국에도 대형 영리병원 체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8월 30일에는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편성하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축소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보다 2,211억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국고지원이 시작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다.



2016.2.18.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보고회,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야’

2015년 민중총궐기(11.14)에서 시민들은 세월호 진상규명, 한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노동개악 반대 등의 요구사항을 외쳤다. 이날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게 됐다. 그날 그 거리에서 누구라도 물대포로 쓰러질 수 있을 만큼 물대포는 ‘살상무기’에 가까운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사건 초기부터 경찰은 민중총궐기가 불법폭력시위이며 경찰 진압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다. 이에 인권, 법률, 시민단체들은 국가폭력조사단을 구성하여 당시 거리로 나온 시민을 향해 자행된 국가폭력을 조사하였다. 2월 18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조사단은 추가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크게 총론과 정부의 사전 대응, 현장 대응(차벽과 물포 사용), 경찰의 사후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 제언을 담고 있다. 특히 제언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안하였다.

20대 국회에 들어 안전행정위원회가 ‘백남기 청문회’(9.12)를 열었고, 물대포 살수는 위법이며 경찰의 잘못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국가폭력으로 목숨을 잃어왔다. 그러나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고 제대로 책임자가 처벌된 역사는 없다. 잘못된 자들의 뻔뻔함을 그대로 두는 한, 거리에서 누구라도 죽을 수 있다.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2016.2.23.

인권활동의 기록을 모으다. “인권 아카이브”

한국 인권운동의 역사가 25년이 되어 가고 있다. 인권연구소 ‘창’에서는 지난 인권운동의 기록을 모아 정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인권아카이브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2016년 2월 23일 인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지고 인권단체에 보급을 진행했다. 또한 인권연구소 ‘창’에서는 수집된 기록물을 대중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2016년 5월부터 ‘오픈 아카이브’ 홈페이지 개발을 시작했다. ‘오픈 아카이브’ 홈페이지는 누구나 쉽게 인권의 기록을 다운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오픈할 예정이다.



2016.2.24.

광화문에 유령이 나타났다! 앰네스티 유령집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 앞둔 2월 24일 오후 8시 30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 크기의 홀로그램 스크린에 등장해 실제 집회 및 행진과 같이 대열을 이루며 “평화행진 보장하라”,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집회는 본질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목소리가 들리고, 눈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열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진짜가 아닌, 유령이 되어버린 시민들의 목소리도 청와대로 가지 못했다. “유령집회”가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의 억압적인 방침을 잔망스럽게 꼬집은 마지막 홀로그램 집회로 기록되길 바란다.



2016.2.24.

“애도는 죄가 아니다” 416 노란리본법률지원위원회 출범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연행·소환되었고, 벌금폭탄을 맞고 있다. 2015년 4~5월 세월호 1주기 투쟁동안 약 550명이 연행되었고 400명 이상에게 소환장이 발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7명이 구속되었다.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일, 단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맞는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한다. 이러한 사법탄압이 더 이상 개인이 감내하는 일이 아닌 함께 책임지자는 문제의식에서 2월 24일 법률가, 활동가, 시민들은 <416 노란리본법률지원위원회(아래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가만히 있기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 앞에 놓인 사법탄압에 맞서 함께 저항하기 위한 울타리가 되고자 한다. 재판을 앞두고 법률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며 시민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기르며, 나아가 모일 권리, 애도할 권리, 저항할 권리를 위한 활동에 기여하고자 한다.



2016.3.2.

국정원의 숙원 사업, 테러방지법 통과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192시간에 걸친 사상 초유 야당 필리버스터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강행처리되었다. 17대 뿐 아니라 18대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통과되지 못했던 국가정보원의 숙원사업을 19대 국회가 이루어주었다. 덕분에 통신, 금융 등에 대한 국정원의 은밀한 감시권한이 더욱 막강해졌다. 부정선거, 국내정치 개입, 스마트폰 해킹을 저지른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6월 테러방지법의 시행 이후 국정원은 내국인 1만1천명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3.3.

20대 총선 후보 바로 알기 “막돼먹은 친구를 소개합니다”

언제부턴가 선거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 제도로 전략해버렸다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대표할 후보가 평소에 어떤 언행을 보였는지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수원지역에서는 2016년 4.13 총선을 준비하며 지역 국회의원 후보 중 삿대질, 막말, 색깔 논쟁만 일삼았던 2인을 “막돼먹은 친구”로 선정,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이들의 행적을 널리 알리는 “수원의 막돼먹은 친구를 소개합니다”(막친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막친소의 활동으로 인해 2인의 막돼먹은 후보 중 한 명이 당선에 실패하면서 막친소는 50%라는 놀라운 목표 달성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6.3.8.

성소수자 유권자 운동의 시작, 레인보우보트

성소수자들이 정치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에 침묵하지 않겠다며 20대 총선에서 유권자 운동을 시작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개인들이 결성한 성소수자 유권자 운동 네트워크인 “평등을위한한표 레인보우보트”는 3월 8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족을 알렸다. 성소수자 혐오 조장 정치인 12명을 선정해 그 가운데 최악 중의 최악을 뽑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으며, 총선을 앞두고 반성소수자 발언을 서슴지 않은 박영선, 김무성, 황우여 등이 상위에 올랐다.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선언인 <레인보우 유권자선언>에는 전국 5,664명이 참여했으며, 홈페이지에 지역별 선언 인원을 실시간 공개했다. 이외에도 레인보우보트는 소수자 인권과제 11대 요구안 발표 및 정당 질의, 유권자 사연 공모 등 활동을 펼쳤다. 레인보우보트는 성소수자 인권 입법을 위한 정치세력화를 꾀하는 본격적인 조직체로서의 의의가 있으며 2017년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2016.3.9.

“전환치료” 폭력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하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에 기인하여 소위 전문가의 권위를 빌려 잘못된 성정체성을 치료하겠다고 시도하는 것을 ‘전환치료’라고 부른다. 이는 강제적 상담, 정신병원 입원과 치료, 전기충격치료, 교정강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이 자체가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폭력의 역사와 결합되어 있다. 2015년 가을 종교지도자와 가족에 의해 전환치료를 강요받고 폭력을 당한 한명의 성소수자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에 찾아온 것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전환치료 폭력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올해 3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소수자인권, 여성, 장애, 법률, 건강, 종교단체로 구성된 ‘전환치료 근절 운동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정신병원에 강제 구금되고, 종교지도자에 의해 폭력적인 종교 행위를 강요당하고, 차마 치료/치유라고 이름붙이기도 부끄러운 ‘요법’들을 강요당해왔는지 당장은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1973년 의료전문가들이 동성애가 정신병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정신장애’라고 부르지 않는 추세에서도 끊임없이 차별과 혐오에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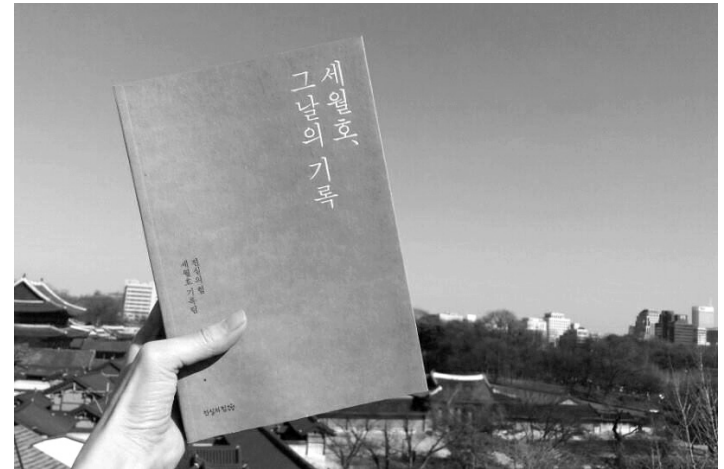
하여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비정상적인 병리현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 권력이 존재한다. 전환치료는 동성결혼이 법제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성소수자를 근본적으로 억압하고 차별하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2016.3.10.

세월호, 그날의 기록 출간

재단법인 진실의힘은 15만장에 가까운 세월호 관련 재판 기록과 3TB가 넘는 자료를 분석하여 2281개의 주석을 단 <세월호, 그날의 기록>을 출판했다. 2015년 봄, 박수현 학생 아버지 박종대 씨와의 만남으로 시작된 책이다. 진실의힘은 군사독재 정권 하 간첩으로 조작된 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밝히고 손해배상을 통해 국가책임을 추궁하는 데 성공해 만들어졌다. 세월호 유족들이 가야할 시간은 진실의힘이 견뎌온 시간이었다. <세월호, 그날의 기록>은 평범한 시민의 눈을 조명탄 삼아 어둠 속에 갇힌 진실을 찾고자 했다. 책은 2014년 4월 세월호 출항의 순간부터 4월 16일 10시 30분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101분을 생생하게 그렸다. ‘왜 구하지 못했나’, ‘왜 침몰했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배, 어떻게 탄생했나’ 여전히 맴도는 질문에 또한 답했다.



2016.3.17.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파리가 한광호를 죽였다

현대자동차가 기획하고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 공작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한광호 조합원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지난 3~4년간 사측의 가학적 노무관리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범국민 열사대책위를 구성, 양재동 현대자동차 앞에서 농성을 하며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고인이 떠난 지 216일 만인 지난 10월 18일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이 제기한 산재 인정 청구에 대해 고인의 우울증이 사측의 불법적 쟁의행위와 노조 활동 탄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산재(업무상 질병)가 맞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와 한광호 열사 범국민대책위는 한광호 열사에 대한 산재 인정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가학적 노무관리를 지시한 유시영 회장에 대한 책임을 확인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판정으로 유성기업 배후에 있는 현대자동차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엔 111억을 출현하면서,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내모는 정몽구 회장과 책임자들을 단죄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6.3.21.

물고기들의 떼죽음, 알권리로 살아오다.

2014년 수원 삼성전자 우수토구 앞에서 물고기 1만여마리가 떼죽음 당했다. 지역시민단체들은 물고기들의 죽음이 단지 환경오염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화학사고라고 결론내리고, 지역사회에서 화학물질 사고와 지역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년동안의 논의 끝에 2016년 3월 화학사고 대응과 지역주민 알권리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 알권리 조례는 한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주요한 쟁점으로 삼아 제정된 첫 번째 조례이다. 현재 수원지역에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화학사고 관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지역주민 알권리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만여 마리의 물고기의 안타까운 죽음이 지역주민 알권리조례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 지역 단체들은 물고기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생명이 사라져가며 남겨준 알권리조례를 수원지역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활동 중이다.



2016.3.22.

20대 총선, 차별 내리고 인권 올리고?

20대 총선(4.13.)을 앞두고 인권단체들이 <4.13총선 인권올리고가이드>를 제작하여 발표했다. 1부는 선거권을 둘러싼 인권의 고민들을 담았다. 장애인,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 여전히 참정권은 동등하지 않다. 2부는 선거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말잔치만 가득한 허황된 복지공약이나 북한과 싸워 이기려는 가짜 안보 내리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진짜 안보 올리자는 제안을 담았다. 혐오와 차별을 거두고 평등 올리는 정치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었으나 과연 한국사회의 인권은 올라갔는가? 아직 대답할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



2016.3.24.

재벌특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특별법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규제프리존특별법(3.24. 여야 공동발의)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 중이다. 공동발의에는 국민의당도 참여했다. 비수도권 광역시도지사들도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별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 관련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명시적인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라 생명과 안전,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비수도권 규제완화는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주는 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커서 국토균형발전 효과도 없다. 게다가 이 법은 전경련 청부 법안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이 법을 왜 그토록 통과시키려 하는지 밝혀졌다.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2016.3.29.

정말 아동학대를 예방할 생각이 있기는 한가! 각 정당 아동학대예방정책에 대한 답변 분석 결과 발표

올초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랐지만, 2월 25일 발표된 정부 대책은 ‘후 발견+사후대응’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근본적 대책은 생략돼 있었다. 이에 <인권친화적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아동학대정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한편, 정당들의 인식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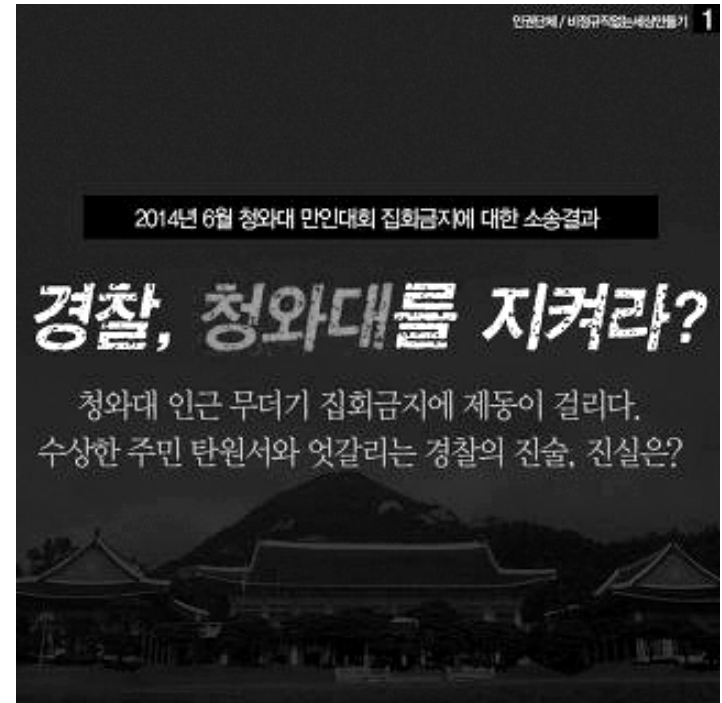
새누리당을 제외한 5개 야당이 보내온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아동학대를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로만 축소 인식하고 있었고, 아동학대의 예방/조기 발견/신고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아동의 사회적 지위를 높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3월 29일, 각 정당 답변의 문제점을 친절히 분석한 결과와 함께 △아동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금지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 확대 △아동의 방어권 등 권리중심의 지원책 마련 △시설 중심 보호 대책의 재검토 등 12가지 핵심 요구안을 전달했다.



2016.4.2.

청와대 인근 무더기 집회금지에 제동이 걸리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를 2014년 6월 10일에 개최하려고 청와대 인근 61곳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신고된 장소 61곳 전부 집회를 불허했다. 당일에는 집회 신고 장소를 원천봉쇄했고 참여한 시민 69명을 연행했다. 61곳의 불허 사유가 조금씩 달랐지만 대부분의 장소에 집시법 제8조 제3항(생활평온침해)라는 사유가 들어가 있었다. 61곳의 불허된 곳 모두 집시법의 위헌적 적용이 문제되었지만 그 중 가장 문제적인 1곳을 선정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3개월간의 긴 소송기간 동안 경찰이 보였던 태도와 제출된 증거들은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의혹과 의심을 더욱 키워왔다. 증인들의 진술은 엇갈렸고, 경찰이 받았다는 주민들의 탄원서는 6월 10일 집회와 무관한 탄원서였으며, 그 시기마저 일치하지 않았다. 결국 2015년 10월 22일 1심 승소를 했고, 경찰의 항소도 기각되어 2016년 4월 2일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6.4.10.

“평화와 군사기지는 공존할 수 없다.”

해군은 작년 2015년 12월 1일 제주기지전대를 창설하고 이어 2016년 2월 26일에는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을 열었다.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은 “평화와 군사기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밝히며 해군기지 반대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해군은 지난 3월, 강정주민과 활동가 등에게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 책임을 이유로 34억 5천 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에 철회 요구를 해왔다. 구상권 대응과 관련하여 강정마을회는 4월 10일 긴급마을총회를 개최하였고 비상천막을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며 비상체제에 돌입함을 선언했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응하여 민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를 단장으로 25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였고 법률적 대응을 함께 하고 있다. 특히 해군이 통상적이고 공개적인 소송을 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공개 방식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구상권 청구과정에서 어떠한 내부적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의혹을 자아냈다. 정부가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할 것과, 원희룡 도정 역시 부당한 구상권 청구 철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2016.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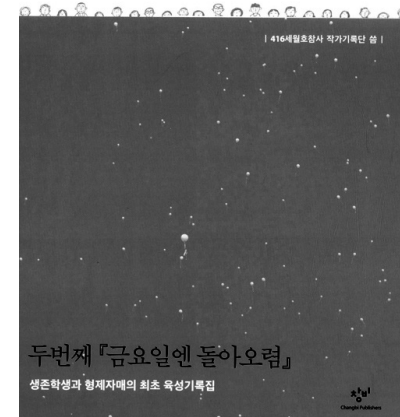
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들의 이야기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출간

2015년 <금요일엔 돌아오렴>에 이어 발간된 세월호 육성 기록집이다. 참사 당시에 생존한 단원고 학생 11명과 형제자매를 잃고 어린 나이에 유가족이 된 15명이 털어놓은 2년여 삶의 구술이 담겨있다.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은 서울과 안산을 수십 차례 오가며 ‘사건 당사자’들과 그동안 진상규명활동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어린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기록했다. 세월호 사건을 온몸으로 겪어온 이들이 전해오는 삶의 통찰은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을 넘어 어떤 마음과 감각으로 이들과 접촉하고 함께 해야 하는지 다시금 고민하도록 만든다. 한국사회의 진실을 드러내는 기록문학으로도 인정받아 제31회 만해 문학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



2016.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선포, 함께 행동하자

세월호 참사 2주기,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년 기억, 약속, 행동 문화제’가 열렸다. 1만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쏟아지는 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찬 광장에서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이 선포되었다.

2015년 수평적인 풀뿌리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4.16인권선언 제정안 발표(2015.12.10.) 이후 노란리본셀카, 포스터 붙여 Hands Up, 만인낭독 프로젝트 등의 선언인운동이 이어졌다.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세월호참사 2주기의 소중한 약속이 되었다. 우리는 더욱 강해졌으며 인권을 나침반 삼아 참사 이후의 사회로 한걸음 내딛었다. 4.16인권선언은 “선언문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다시 말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갈 것이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후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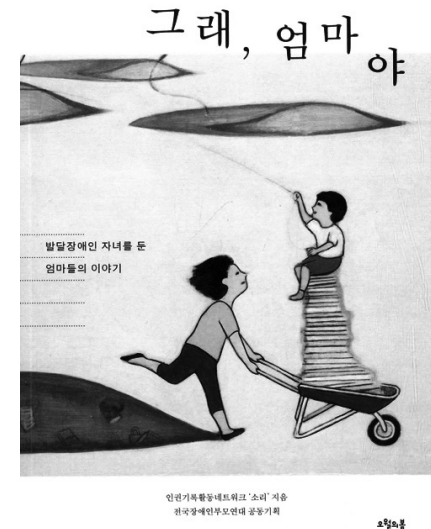
한편, 선포 이후 4.16인권선언 토론회(5.28.)가 열려 세월호 참사와 인권선언운동의 의미를 꼼꼼히 짚어보았으며, 인권선언운동의 기록을 정리하는 아카이빙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2016.4.22.

포기도 설부른 희망도 아닌, 그 사이를 진동하는 발달장애인 엄마들의 이야기, 『그래, 엄마야』 출간

한국사회 발달장애인 숫자는 약 20만 명. 이들의 돌봄을 전담하는 주체는 거의 ‘엄마’들이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현장에도 엄마들의 활동은 두드러진다. 그러나 발달장애 자녀와 사는 이 엄마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었다. 인권기록네트워크 ‘소리’는 이 엄마들의 ‘자기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엄마라는 굴레는 상상 이상으로 막강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더구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몰이해로 가득한 사회 속에서 양육전담자로 사는 엄마들이 짊어져야 할 무게는 너무도 무거웠다. 그리하여 인터뷰에 응한 엄마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라고 묻는 것은 생경한 일이었다. 엄마들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아이와 분리된 ‘나’의 시간을 상상하기 힘들어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을 절절히 깨닫게 해준다. 한편 이로써 시작점의 문제를 알아챘기에, 이 엄마들의 삶이 다른 길에 설 수 있도록 함께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2016.4.28.

안전할 권리, 화학물질 알권리 외친다! **한솔케미칼 노동자 백혈병 산재인정 촉구**

4월 28일, 반올림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서 백혈병 산재 신청과 더불어 산재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재해신청자는 전북 완주 한솔케미칼 공장에서 일하던 30대 초반 노동자 이창언 님이다. 이창언 님은 한솔케미칼에 2012년 입사해서 주로 LCD 생산 과정에 쓰이는 전극보호제, 세정제 등을 생산 했다. 용액들을 계량하고 혼합하는 것이 이창언 님이 수행했던 작업이었다. 하지만 이창언 님은 자신이 다루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무슨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모른 채 작업을 해왔다.

한솔그룹은 범 삼성가(家)의 일원으로 한솔케미칼에서 생산된 제품은 주로 삼성전자에 납품되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창언 님의 백혈병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자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희귀병과 연관이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창언 님이 생산한 제품을 삼성전자 노동자들도 사용했다는 것인데, 같은 화학물질을 다룬 노동자들이 직업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이창언 님의 산재 승인을 위해 계속 싸우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화학물질 안전할 권리 공부모임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전라북도 산업단지 환경안전 시민사회 네트워크(준)' 구성으로 이어져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안전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창언님께 보내는 시민들의 응원메시지



2016.5.2.

최악의 환경 재해, 침묵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2011년 5월 정체불명의 폐질환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뒤 한 달동안 6명의 환자가 같은 증상으로 사망을 하였다. 이들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폐가 굳는 섬유화 증세를 보이다 사망하였는데,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이들 사망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밝혀졌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자는 현재 까지 사망자 239명, 폐질환자 1528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민관합동 폐손상조사위원회에 의하면 가습기 사용자 수가 약 8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4261명이 신고를 하였으며 지금도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일상의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드러난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또, 환경부와 식약처가 생활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채 유통을 허가하고, 옥시 측의 연구 용역을 받은 연구진은 가습기 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거짓 증거를 발표하여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우리 생활용품 안전에 관한 문제를 드러낸 최악의 재난 사건으로 밝혀져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며 불매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2016년 5월 2일 옥시 한국법인 대표가 사과를 하였고 이어 옥시 영

국 본사 대표가 공식 사과를 하였고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원료물질 위해성 평가와 안전기준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016.5.7.

일터괴롭힘에 의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죽음

경기도의 한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청년이 있었다. 2015년 12월, 그는 전공과 관련이 없는 식당 조리부로 ‘현장실습’을 나갔다. 처음 취업했을 때, 실습생과 학교, 업체 3자가 참여해 작성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는 ‘현장실습 시간은 하루 7시간, 연장은 1시간’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하루 11시간 미만 근로’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써야 했다. 그것도 서류상의 계약일 뿐이었다. 원래 오전 11시 출근이지만 이리저리한 ‘벌칙’ 명목으로 2시간 먼저 나오는 일이 잦았다. 양식부 막내로 ‘수프 끓이기’ 업무를 담당했던 그는 수프를 쏟아 발에 2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산재보상도 받지 못했다. 괴롭힘도 심했다.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욕먹기”라고 했다. 선배가 집에 태워다주며 차 안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날도 많았다. 차라리 입대해야겠다 결심하고 상사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할 그날, 크게 꾸지람을 들은 그는 오후에 매장을 나간 뒤 목을 맨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의 아버지는 또 다른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출신으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보고, 현장실습에서 위험한 일로 이어지는 청년 노동자들의 처지가 구조적인 문제라

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냈다. 이 사건을 주변에 알리고 시민사회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경기 지역의 노동, 시민사회 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하고 교육청과 해당 업체를 압박해 회사의 사과, 보상, 재발 방지 대책과 경기도 교육청 차원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대책을 얻어냈다. 그가 사망한지 5개월만에, 7월 13일 첫 추모행사를 시작한 지 2개월 반만에 이뤄진 일이다.



2016.5.9.

노역 살려간 노동자 알몸검신하는 구치소나 기각하는 인권위나 다를 바 없어

기름전자 유흥희 분회장이 주거침입죄로 구치소에 갔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국회에서 했던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2014년 야반도주한 최동열 회장의 집을 찾아가 벨을 눌렀기 때문이다. 억울해서 벌금을 거부하고 노역을 살려갔다. 교도관들은 강제로 유흥희 분회장의 속옷을 벗겼을 뿐 아니라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소송해도 진다”고 막말도 했다. 이에 5월 9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교도소는 법무부훈령인 계호업무지침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는데 위험 물품이나 마약을 반입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체검사를 정밀하게 할 수 있다. 모든 수용자를 알몸 검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10월말 강제로 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비웃은 것은 ‘객관적 증빙’을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러려고 진정했나, 이러려고 국가인권기구 만들었나 싶다.



2016.5.10.

아시아 LGBT 부모모임 초청 포럼 ‘그래, 우리 같이’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모임이 성소수자 인권을 외치며 활발히 활동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5월에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들이 모여 경험과 비전을 나누는 국제포럼이 개최됐다. 성소수자 가족모임이 먼저 만들어진 중국, 일본, 미국에서 온 비슷한 문화권의 아시아계 부모들이 서로의 역사와 활동 경험들을 공유하고 운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했다. “그래, 우리 함께”라는 제목처럼 존엄하게 공생하기 위한 용기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성소수자 부모모임은 이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2016.5.13.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시행 1년, 여전히 쫓겨나는 임차상인의 목소리

2015년 5월 13일,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가 재산권으로 법에 명시되었다. 하지만 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각종 예외조항들이 생겼고, 본 법의 시행 전 계약 만료 임대차의 경우 권리금 회수회 보호에서 제외되었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쫓겨나는 상인들이 생겨났다. 2016년 5월 13일은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는데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삶을 잃고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다시 한 번, 전국의 쫓겨나는 상인들이 모여 목소리 내며 개정되어야 할 법의 방향을 제시했다.



2016.5.17.

강남역 10번 출구를 뒤덮은 포스트잇, 한국의 여성혐오를 고발하다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노린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체포된 직후 범인은 여성들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 사건을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Misogyny)로 인해 발생한 ‘여성혐오범죄’라고 보고, 강남역 10번 출구에 피해자 추모 공간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의 여성혐오를 증언했다. 온라인에서는 모든 여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의미의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번졌다. 그들은 동시에 범인이 꿈이 좌절된 신학대생임을 강조해서 보도하거나 피해 여성을 ‘화장실녀’로 보도했던 언론의 여성혐오적 보도 행태와 이 사건이 혐오범죄임을 부정하고 정신질환자 처벌 강화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경찰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추모 포스트잇 물결은 강남역 10번 출구를 넘어 청주, 대구, 울산, 부산, 대전 등 전국으로 번졌다. 이후 반-여성혐오 자유발언대, 여성혐오 반대 공동행동, 낙태죄 폐지 검은시위 등 페미니스트들의 오프라인 말하기가 이어지고 있다.



2016.5.17.

**혐오에 반대하는 무지개 물결,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5월 17일은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 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날로, 이를 기념하여 이날을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로 삼고 전 세계 130여 개 국가에서 동성애를 정신병이나 전염병으로 보는 동성애혐오에 대항하기 위한 투쟁을 벌인다. 한국에서는 조직화된 혐오가 거세지는 상황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5월 14일 “혐오에 저항하라! 평등을 노래하라! 무지개를 펼쳐라! 지금, 여기, 당신으로부터”라는 이름으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무지개 깃발 플래시몹이 펼쳐졌으며, 5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 공동행동>의 이름으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혐오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16.5.17.

옥바라지 골목의 마지막 여관, 강제집행 당하다

2016년 종로구 무악동에는 ‘옥바라지 골목’이 있었다. 경성감옥을 거쳐 서대문형무소가 되기 까지, 그곳은 형무소를 주변으로 옥바라지를 했던 사람들과, 사대문 밖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던 작은 동네였다. 조세희와 박완서 소설가의 문학적 배경이 되었던 곳이면서, 인혁당 사건의 어머니들이 머물며 옥바라지를 했던 동양여관이 있었다. 그러나 오래된 골목이 있는 정말 작은 동네에 롯데캐슬이 파고 들었고, 주민들은 이주했다. 남은 주민 두명이 옥바라지골목의 역사성과 원주민을 쫓아내는 방식의 도시 재개발의 문제를 제기하며, 연대인들과 독립문역 3번 출구 파란 천막에서 무더운 여름을 살아냈다. 옥바라지 골목의 마지막 여관이었던 구본장 여관은 2016년 5월 17일 강제집행 당했다. 용역 백여명과 소화기, 크레인 등을 이용해 그곳을 지키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내쫓았다. 하마터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강제집행이었다.



2016.5.18.

정보수사기관 무차별 통신자료수집

테러방지법 논란 이후,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확인해 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수사기관에 소환된 적이 없는 국회의원, 언론인, 활동가, 세월호 가족, 심지어 평범한 직장인의 통신자료가 경찰은 물론 국정원에까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다. 권력자들이 자신들만의 불투명한 장막 속에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동안, 국민들의 통신 생활은 일거수 일투족이 투명하게 제공되고 있다. 2016년 5월 18일 통신자료가 제공된 피해자 5백 명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소송과 국가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연이어 제기하였고 국회에 대안입법을 요구하였다.



2016.5.18.

어버이연합 게이트, 보수단체에 집회를 사주한 국정원의 사주를 봐드립니다

작년에는 해킹을 통한 민간인 사찰로 무리를 일으킨 국정원이 올해는 보수단체에 집회를 사주하고, 총선 즈음에는 탈북을 기획하여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등 다시 한 번 파렴치한 행위들로 국민들의 분노지수를 한껏 높여주었다. 이에 ‘국정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국정원 경기도 사무실 앞에서 작년에 이어 ‘여기 국정원이 있다 2탄, 보수단체에 집회를 사주한 국정원의 사주를 봐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국정원의 사주를 받아 낭독하였는데 왜 국정원이 계속 빨짓을 해오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가자들은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는 망각한 채 계속 빨짓을 계속 할 경우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2016.5.24.

3,000여 명의 시민들, 혐오와 차별을 선동한 기독교자유당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2016년 총선 과정은 성소수자, 이주민, 무슬림 등 한국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선동으로 넘쳐났다. 총선 직후 인권단체들과 3,195명의 시민들은 정당활동에서 성소수자, 이주민, 무슬림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확산하는 기독교자유당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전례 없는 대규모의 집단진정을 제출하며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는 진정인의 규모만큼이나 기자회견 참가자도 많았고 취재열기도 뜨거웠다.



2016.5.24.

국가인권위, 영터리 인권위법 개정으로 A등급 유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이전 ICC)에서 5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ICC 등급심사 승인소위에서 2014년 3월과 10월, 그리고 2015년 3월까지 세 차례 연속 등급 보류 결정을 받았다.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이 임명되고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인권위와 법무부는 2016년 1월에 개정된 인권위법에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담은 것처럼 포장해 보고해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인권위법을 지키지 않으며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인권위원을 임명하고 있다. 법 개정 이후에 새누리당은 여성할당제에 따라 여성을 임명해야 하나 그러지 않고 남성법조인 출신인 정상환 위원을 임명했고, 청와대는 후보추천 공지도 없이 장애순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서 권고한 ‘단일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2016.5.25.

“질병정보 노출, 에이즈 강제검사, 내무반 소독” 경찰청의 무능한 대응이 에이즈 공포를 강화시키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한 의무경찰이 헌혈 후 HIV 양성 의심 통보를 받고 경찰병원으로 긴급후송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아무 정보도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했던 당사자는 경찰청 내 고충처리 상담전화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상담내용의 비밀은 지켜지지 않았고, 경찰청은 당사자의 상황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 대응책을 내 놓았다. 개인의 질병정보가 노출될 수 있게 내무생활을 했던 부대원 강제검사는 물론 내무반 소독까지 진행한 것이다.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는 감염전파 위험이 전혀 없고 HIV 양성반응이 최종 확진판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를 우려로’ 포장된 공포는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다.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는 이 사건을 에이즈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경찰청의 차별적 행정조치가 낳은 결과로 만들어진 사건으로 규정하고 당사자의 안정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즉각 내 놓아야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2016.5.25.

법원의 동성커플 소송 각하,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2016년 5월 25일, 서울서부지법(재판장 이태종 서부지법 법원장)은 동성부부인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에 대해 1심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한국 최초로 동성혼의 효력을 직접 다루는 신청사건이었다. 신청인인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2013년 9월 7일 공개결혼식을 올리고, 같은해 12월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구청은 이 혼인신고에 대한 불수리를 통보하면서, 근거로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이 무효라는 민법 조항(제 815조 제1호)과 ‘부부(夫婦)’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민법 조항들(제826조 내지 834조)을 제시하였다.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1심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할 것”이라 밝혔다. 소송대리인단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역시 5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정에 대한 항고와 함께, 한 커플에 대해 각하할 때마다 2배수 이상의 소송 당사자 수를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법제화 결정(Obergefell v. Hodges, 2015. 6. 26.)에 이어, 한국에서는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더욱 활발한 혼인평등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2016.5.25.

더이상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지 말라! 남원평화의집 장애인폭행사건

전북 남원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평화의 집에서 시설 종사자인 사회복지사에 의해 자행된 엄청나고 지속적인 폭행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평화의 집은 어느 정도 경제 능력이 있는 가족들이 실비를 납부하여 운영되는 시설로 이 곳을 찾는 이들 중에는 장애가 심한 자녀를 맡기기 위해 전국의 시설들을 찾고 찾다가 이 곳까지 오게 된 부모들도 많다. 평화의 집 운영주체는 한기장복지재단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만든 사회복지법인이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는 우리나라 최대 법인으로 전국에 114개가 넘는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더이상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을 잃어 버리고 폭행과 학대가 일상이 되어버린 평화의집은 즉각 시설폐쇄하고 운영주체인 한기장복지재단 역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이다.



2016.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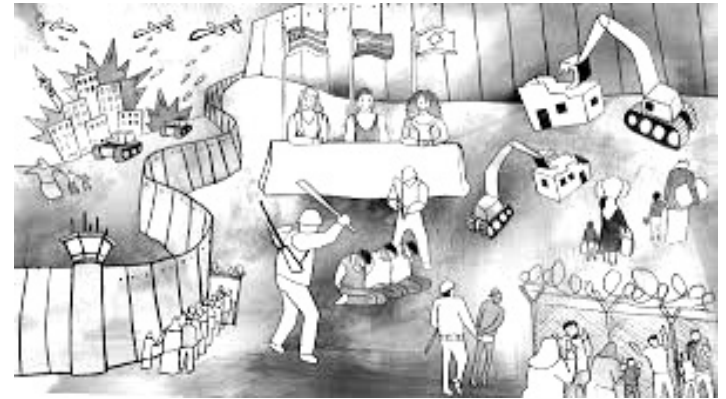
<핑크워싱> 상영과 더불어 이스라엘에 대한 BDS운동을 선언하다

서울인권영화제는 <제3의 성(Third Person)>의 상영 취소 결정을 계기로, 국내외의 19개 인권·문화단체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BDS(Boycott·Divestment·Sanctions)운동 동참을 선언했다. 이 행동은 2016년 21회 서울인권영화제 <나는 오류입니까>를 앞두고 영화제 측이 이스라엘에서 제작된 성소수자 다큐멘터리 <제3의 성(Third Person)>(2015)에 대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행하는 차별과 폭력에 공모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영화 상영을 취소하면서 촉발됐다.

<Third Person>의 배급사와 제작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서울인권영화제의 결정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BDS운동에 대한 비난과 함께 이 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수차례 전해왔다. 하지만 서울인권영화제는 <Third Person> 측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온당하지 않으며 이 다큐멘터리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의 국가 이미지를 포장하는 '핑크워싱(Pinkwashing)'이라 판단했다.

이에 21회 서울인권영화제에서는 이스라엘의 핑크워싱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핑크워싱>을 상영하고, '광장에서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함께 성소수자-핑크워싱-BDS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2016.5.28.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의 죽음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달려오는 전동차에 치여 생을 마감하였다.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는 노동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2013년 성수역, 2014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매번 대책은 발표됐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사고 당시 고인이 바쁜 업무로 인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수 밖에 없었고, 140만원 월급에서 미래를 위해 100만원 씩 알뜰히 저축해왔다는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지자 많은 시민들은 구의역 대합실과 9-4번 승강장에 추모의 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과 국화꽃, 컵라면을 놓으며 함께 마음 아파했다.

이번 사고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를 외주화하고 업무가 익숙하지도 않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고용한 기업의 탐욕과, 이를 방조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이 얼마나 많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지 보여주는 사고였다.



2016.5.28.

20대 쌍둥이 형제 사망 사건, 누가 또 송파 세모녀를 만드나

지난 5월 서로를 의지하며 살던 20대 쌍둥이 형제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살던 지하 월세방에는 유서 대신 70여만원의 건강보험료 체납 독촉장이 함께 발견되었다. 2014년 대한민국을 큰 슬픔에 빠뜨렸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또 일어난 것이다. 송파 세모녀도 쌍둥이 형제도 모두 경제적 형편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였다. 이들처럼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가 현재 200만 가구, 400만명이 넘는다. 건강보험 체납자가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못 내면 보험급여가 중지되고 체납 보험료에 연체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게 ‘병원 이용 금지’ 조치와 ‘체납 보험료 징수’라는 불이익만 적용할 뿐 체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체납자 수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 경제위기와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장기 실직 및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제도와 국가의 방임때문에 스스로 건강권을 포기하고 죽어가고 있다. 가난하다고 해서 건강을 압류할 수 없다.



2016.5.30.

갈수록 높아지는 생리대 가격, 깎창 생리대의 비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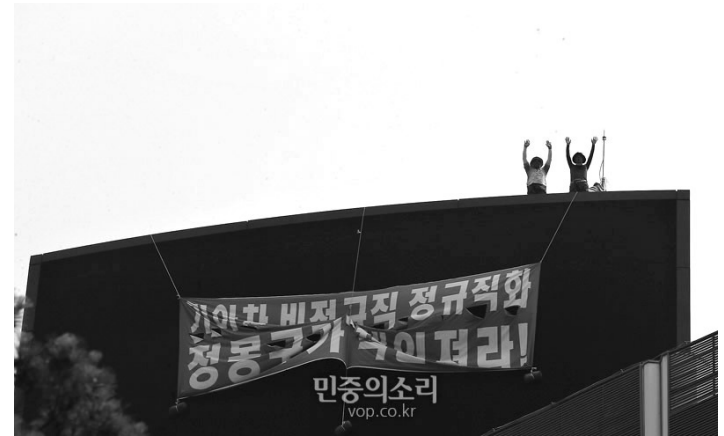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날이 갈수록 비싸지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살 수 있는 생리대의 갯수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지난 5월 30일 한 학생이 1주일 동안 결석하자, 담임교사가 학생의 집을 찾아갔다. 생활필수품인 생리대 가격이 너무 높아 생리대를 살 수 없었던 이 학생은 생리가 시작하자, 1주일동안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수건을 깔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소식을 접한 다른 네티즌은 생리대 대신 깔창을 깔고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 와중에 유한킴벌리는 생리대 가격을 20%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이를 해결하겠다는 여러 정부 시책이 있었으나, 아직도 생리대값 인하나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는 생계급여 등은 현실적으로 인상되지 못했다.



2016.6.8.

고공농성하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내려와

대법원의 결정과 1심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할 것을 현대기아차에 요구하며, 시청광장 옛 인권위 건물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최정명과 한규협 비정규직 노동자가 농성 363일째인 6월 8일 땅으로 내려왔다. 근 1년간의 농성으로 인해 고혈압과 당뇨로 건강이 매우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사전에 약속된 기자회견 참여도 막고 구급차로 실어갔다. 두 노동자를 환영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과 동료노동자들은 강제 체포에 항의했다. 병원에서 건강진단 결과를 받고서야 그들은 구속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광고업체 명보 애드넷은 5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8월 18일 최정명, 한규협 노동자 등 3인의 가전제품에 압류딱지를 붙이며 경매를 실시했다. 그러는 동안 기아차 정규직과 사측은 10월 31일 비정규직 4,712명중 950명(20%)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특별교섭에 잠정합의를 했다. 심지어 해고자 이동우, 고공농성자 최정명·한규협의 복직도 거부했다.



2016.6.11.

**퀴어페미니스트의 목소리를 담다,
매거진 <뽕> 발간**

2015년 교육부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여성이 경험하는 성폭력, 성차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는 성교육표준안을 들고 나왔다.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도, 이성애 결혼이나 가족이 아닌 다른 모든 가족구성에 대한 언급도 하지 말라고 입을 막아버리는 성교육 지침은 무엇이 우리를 여성 혹은 남성으로 분류되게 만들며 그것이 어떻게 차별과 맞닿아 있는지 질문하고 싶어하는 모두의 인권을 후퇴시켰고, 후퇴시키고 있다. 여성가족부 역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명시한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지 않는다고 삭제를 요구했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페미니즘 액션들 사이에서 행동하는 퀴어페미니스트는 많지만 퀴어로써 경험하는 여성혐오에 대한 목소리는 가느다랗다. 퀴어페미니스트 매거진 <뽕>은 퀴어이자 페미니스트로서 젠더규범과 이성애중심주의에 균열을 내는 목소리를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내기 위해 2016년 6월 창간되었다.



2016.6.12.

**미 올랜도 게이클럽 총격사건,
연대 추모문화제**

2016년 6월 12일,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한 게이 클럽 펄스(Pulse)에서 벌어진 총기난사로 4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LGBT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그들의 친구와 가족들 역시 다치거나 죽었다. 국내 성소수자들은 6월 13일, 27일 2차례 연남동 경의선 숲길공원에서 <서울-올랜도 연대 촛불문화제>를 열어 동성애 혐오범죄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함께하고 희생자를 추모했다. 이 추모문화제는 올랜도 인근 지역 출신이자, 한국에서 성소수자 연구 및 인권활동을 함께 해 온 티모시 깃즌(Timothy Gitzen)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2016.6.14.

혐오 돌려막기? 평등해야 안전하다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혐오살인사건 이후 정부는 ‘여성혐오’를 부인하며 ‘정신장애인혐오’를 부추기는 대책들을 발표해왔다. 이와 같은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안전을 우리의 권리로 말하기 위한 고민을 모아가는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가 ‘안전’대책을 말할 때 그것이 오히려 권리를 제한하고 안전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을 확인한 토론자들은 평등을 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 안전하게 살아갈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7월 8일에는 수원에서도 <혐오를 혐오로 덮는 사회, 안전할 권리에 대해 묻다> 토론회가 열려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2016.6.16.

최저임금1만원을 향한 알바들의 국회 앞 1만 시간 단식투쟁

6월 16일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이 최저임금1만원을 요구하며 국회 앞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과 사측위원, 노동자위원으로 구성되는데 2:1의 싸움이라 최저임금을 높게 인상할 수 없는 구조다. 알바노조는 국회에서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노사정이 협상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알바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위해 단식 투쟁을 한 것은 최초의 일이며,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이었던 국회 코앞에서 단식 노숙 농성을 벌인 것도 최초의 일이다. 18일에는 이가현, 우람 조합원이 단식에 돌입하였고, 26일 박정훈 위원장이 쓰러지자 28일 용운신 사무국장이 단식을 이어갔다. 7월 7일 단식중단까지 318명의 알바노동자들이 12120시간 동조단식에 참여했다.



2016.6.17.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 유엔에 알리다

2016년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펼친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집회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은 “한국이 이룬 모든 것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특히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 차벽과 물대포 사용, 집회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탄압, 교사와 공무원 등 노조 설립의 어려움, 기업의 노조 무력화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백남기 농민의 딸 백민주화씨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진행된 구두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의 과도한 국가폭력과 물대포 사용의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또한 발언 중 백남기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있는 사진을 5초간 들고 한국 정부의 진실한 사과,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정의 실현을 촉구하기도 했다.



2016.6.17.

유엔에 한국의 여성폭력 문제를 알리다

올해 5월 17일,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일어났다. 제 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인권정책센터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공동 구두발언을 통해 본 사건이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에 의한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차별과 혐오를 나타내는 사건임을 알렸다.



2016.6.17.

김관홍 잠수사의 죽음,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로 실종자 구조 수색에 나섰고, 이후에도 구조 과정에서의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김관홍 잠수사가 6월 17일 세상을 떠났다. 김관홍 잠수사를 비롯해 참사 당시 많은 민간 잠수사들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했다. 이로 인해 여러 부상과 정신적 후유증 그리고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2014년 5월 실종자 수색 중 민간 잠수사 한 분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동료 선임 민간 잠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는 등 국가의 방기로 벌어진 사고에 대한 책임마저 민간 잠수사에게 떠넘기고 있다. 다행히 1, 2심 재판 모두 민간잠수사가 무죄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고 김관홍 잠수사의 죽음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금 엄중히 묻게 한다. 세월호 참사 관련 구조, 수습 활동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일명 김관홍 잠수사법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2016.6.23.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 권리를 말하다

‘월담’은 안산의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조직하고자 하는 단체이다. 2014년 2월부터 선전물을 나눠 주고, 안산역 광장에서 노동상담과 문화제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6월 23일은 그 동안 활동의 경험과 고민을 모아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서 필요한 의제와 투쟁의 방향을 지역 단체들과 함께 나누는 지역토론회가 열린 날이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노조와 같은 조직으로 모이지 못하고 개별화된 공단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이를 쟁취하기 위한 방향은 어디일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다.



2016.6.2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안전에 대한 기업책임의 원칙을 묻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요한 청해진 해운의 행적이 드러났지만,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는 징역 7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침몰의 책임과 구조 부실의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 같은 고위 공무원들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안방의 세월호’ 옥시사태에서도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은 멀기만 하다. 현행 법체계로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 사회에 세월호와 옥시사태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그 경영책임자 그리고 이를 방관하고 묵인한 관료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그러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식’이다. 지난해 출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23일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계 및 의원실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이며

같은 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2016.6.23.

에어컨 정비 노동자 추락사,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태롭다

서울 월계동의 한 빌라 3층 외벽에서 에어컨 수리를 하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가 실외기 앵글이 무너지면서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고인이 아니라 누가 출동했더라도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한다. 삼성전자는 서비스노동자들이 삼성의 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들이라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노동자들의 실적을 관리하고 압박을 가하는 곳은 삼성이다. 한 건의 수리가 곧 임금인 서비스노동자에게 한 가정에서 수리를 위해 오래 지체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임금하락과 직결된다.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 작업이 지연되거나 방문이 이뤄지지 못하면 서비스 평가로 이어져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위험한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할 권리는 하청 노동자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 장비도 없이 위태로운 작업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뿐만 아니라 앞서 2015년 7월에는 경기도 안산에서 LG전자 수리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작업 도중 추락사했고, 2014년 8월에는 전북 장수에서 티브로드 케이블 설치기사가 전봇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작동하지 않는 것은 임금구조와 고용구조 때문이다. 그 해결은 결국 원청 대기업이 책임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2016.6.24.

최초의 성적소수자 인권재단,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무부 법인설립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한국 최초의 성적소수자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지난 2014년 11월 법무부에 사단법인 허가를 위해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5개월 동안 허가를 미루다가 2015년 4월 29일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법무부의 법인 설립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후 재단은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설립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였다. 2016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 목적과 사업을 보면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인권옹호 단체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인권옹호 자체가 이미 개개인의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권옹호의 영역이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부분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지 정확하지 않고, 법무부가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허가를 담당할 주무관청의 하나로 보아야한다” 라고 승소 판결을 했다. 현재 법무부가 항소를 하여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2016.6.28.

죽음의 물대포를 추방하라,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물대포가 한 농민을 쓰러뜨렸다.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 7명이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발됐지만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히려 참가자들을 폭도로 몰며 대규모 수사본부를 설치해 1,097명을 수사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압 책임자는 승진했고 물대포 사용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어떨까?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건을 조사한 국가폭력조사단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에서는 물대포로 실명을 당한 바그너 씨가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아냈다. 영국에서는 물대포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시켰다. 한국에서도 물대포를 추방하자.



2016.6.30.

장애인, 권리의 주체로 무대에 오르다!

2016 세계사회복지대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6월 27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6 세계사회복지대회’ 개회식 중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 시간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와 정진엽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이들은 5분 만에 폭력적으로 진압됐고, 장애여성이 사지가 들린 채 끌려나가는 등의 모습을 지켜본 세계 사회복지사들은 경악했다.

이번 사태는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에 두 차례에 걸쳐 보도됐고, 마침내 공동행동은 주최 측으로부터 폐회식 전에 10분간 정식 발언해줄 것을 제안받았다.

폐회식에서 대표 발언을 맡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이번 대회의 슬로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진시키자’를 언급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자. 사회복지사들이 행동해서 이 사회를 바꿔나가자.”고 호소했다.



2016.6.30.

유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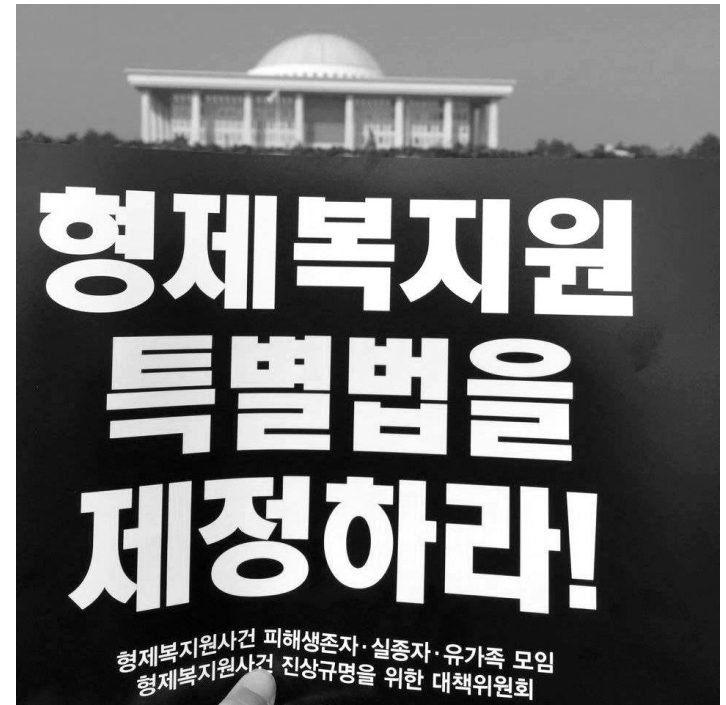
유엔에서 최초로 ‘유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 직이 신설되었다. 이번 결정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가 중요한 인권 의제임을 유엔 차원에서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제도화 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임명된 유엔 독립 전문가는 앞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차별 그리고 증오에 맞서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치게 된다. 또한 개별 국가를 방문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증오 현황을 조사하고 매년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해당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 신설에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성소수자 인권보호와 차별금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6.7.6.

20대 국회, 형제복지원특별법 재발의하다

2016년 7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형제복지원특별법(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을 재발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행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된 법안이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 위로 올라온 순간이다.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회원들은 19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짓밟힌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한동안 괴로워 잠을 못 이룰 정도였는데, 법안 재발의로 다시 왜곡의 시간을 바로잡겠다는 결의를 내비쳤다. 엄혹한 시절 국가의 강파르고 사나운 정책으로 국민이 국민을 가두고 때리고 죽였던 시간과 공간. 20대 국회가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일그러진 과거가 아닐까?



2016.7.8.

사드 한국 배치, 우리는 화약고에 살겠다고 결정한 적 없다

지난 7월 8일 한·미 정부가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그리고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라는 사실을 7월 13일 TV를 보고 알아야 했다. 평택 대추리에서, 제주 강정마을에서, 밀양에서 국가가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는 허상이었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은 더 후진적이었다. 국가 안보라는 성역 앞에 주민의 의견도, 사회적 합의도 모두 무시되었다. 미군이 미국령 이외의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건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한국이 하위 파트너로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포기하고, 한반도를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으며,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할 폐달을 밟겠다는 것과도 같은 말이다. 한·미 정부가 뭐라고 결정했든, 우리는 우리의 세금을 평화로 만드는 평화적 수단이 아니라 군비경쟁에 쏟아 붓겠다고 결정한 적 없다. 사드 한국 배치를 막고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을 꾸리고 여러가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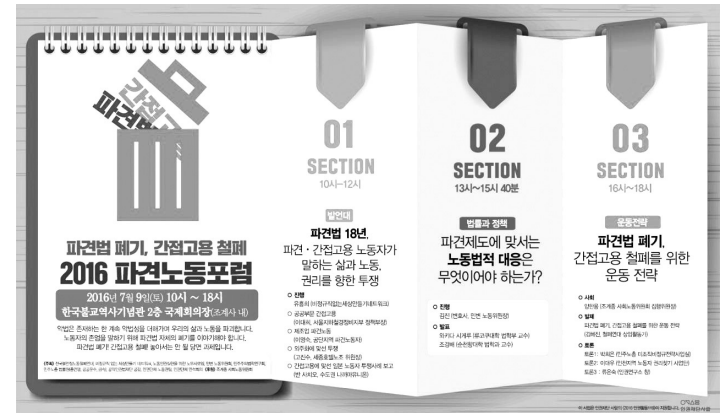


2016.7.9.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2016년 파견노동포럼

파견법 시행 만18년이 되는 지금, 파견법이 낳은 한국사회 노동권 파괴의 현실을 돌아보며, 파견법 폐기를 위한 사회적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7월 9일, 비정규직 운동 단체 및 법률단체, 인권단체 등이 모여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2016년 파견노동포럼’을 진행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파견법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해 노동자들이 대응을 계속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는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들의 이기적인 주장으로 취급되고 있고, 정부는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한다면서 비정규직 확대 개악을 지속하고 있다. 파견법이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파견제도는 확대 개악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파견법 시행 18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파견업무는 더 확대되어 왔고, 고용의제는 의무로 후퇴되었으며, 지금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업종 제한 없는 파견, 전문직 관리직에 대한 파견 확대, 제조업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 등 더 심각한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악법이 존재하는 한 이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될 것이다.



2016.7.12.

개돼지들이라 최저임금1만원은 아깝습니까?

7월 12일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알바노조 위원장 박정훈, 조합원 홍현우 정건 김하린 김서운 조합원이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 '개돼지들이라 최저임금1만원은 아깝습니까'라는 플래카드를 펼치고 기습시위를 벌였다. 7월 7일 교육정책기획관 나향욱이 '민중은 개, 돼지다'라는 발언을 한 것에 빚댄 것이었다. 현행 최저임금의 최종결정권한은 결국 공익위원들에게 달려있는데,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 청와대가 가장 잘보이는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 기습시위를 벌였다.



2016.7.12.

동양시멘트 노동자들과 정규직 쟁취하러 “삼척으로 가드래요~”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이 원직복직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한지 500일 되던 날이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 하는데 월급은 반토막에 일상적인 차별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노조를 만들었다. 만들자마자 사측은 모두를 해고시켰다. 고용노동부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위장도급 판정에 따른 “정규직 전환 실시하고 직접고용 하라”는 요구 하나로 동양시멘트 공장 앞, 49구 광구 앞, 삼척시청 앞, 서울 삼표 본사 앞, 서울과 강원을 가리지 않고 싸웠다. 80여명의 조합원 중 20여명 남짓 남았지만, 투쟁 500일을 맞아 전국의 동지들을 삼척으로 초대했다. 함께한 노동자, 시민들은 삼척 해변에서 조개도 줍고 해물탕도 직접 만들며 정규직 쟁취의 꿈을 나눠주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정규직이다” 외치는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2016.7.13.

한상균을 석방하라! 민주주의 살려내자!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은 쉬운해고 노동계약에 맞서 총파업을 조직했다. 10만 민중총궐기에 앞장섰다. 10만 국민의 목소리를 차벽과 물대포가 가둔 2015년 11월 14일 이후, 한상균위원장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그리고 7월4일, 법원은 도로교통방해를 포함 온갖 죄목을 들먹이며 한상균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87년 이후 노동운동에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고, 사상 유례없는 공안탄압의 상징이었다. 5년 구형 직후인 7월 13일 2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한상균을 살려내자! 민주주의 지켜내자!’ 시국대회를 진행했다. 시국대회 참가자들은 ‘한상균과 함께 함께 저항하는 사람들’을 구성하고, 민변 등을 중심으로 ‘100인 변호인단’을 꾸려 항소심 재판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및 연대단체들은 한상균위원장 공판일에 맞춘 선전전, 집회, 일인시위, 재판 방청 등을 진행하며 한상균 석방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2016.7.18.

“법대로”라는 말의 폭력,
쫓겨난 우장창창

7월 18일, 가로수길 소공창집 ‘우장창창’에 2차 강제집행이 들어왔다. 1차 강제집행 이후 2주 만의 일이다. 용역 40여명이 들이닥쳤고 순식간에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날 우장창창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온라인에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 날 이후 우장창창은 건물주가 유명 연예인 리쌍이라는 이유로 ‘을질’의 대명사가 되었고, 사람들은 건물주가 “법대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우장창창을 비난했다. “법대로”라는 말은 이미 하나의 결론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의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 “법대로”라는 말 속에 감춰진 폭력을 목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대로” 했다는 건물주 리쌍의 입장이 정의가 될 수 없다. 끝내 대화하지 않고 2차례의 강제집행으로 답했던 리쌍에게 묻는다. 무엇이 정의인가?



2016.7.26.

장애인 혐오가 부른 일본 장애인거주시설 집단살인 사건

2016년 7월 26일 새벽 2시 30분경,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 하라시의 장애인시설 ‘쓰구이야마유리엔’에 한 남성이 난입해 흉기를 휘둘러 19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중상을 입은 참극이 발생했다. 현지 언론은 그가 과거에도 주변 종사자들에게 “장애인은 차라리 죽는 편이 가족에게 편하다”는 등 장애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아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한국 장애계는 2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이러한 문제를 알리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전장연은 “용의자가 만들어지게 된 사회적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장애인을 집단 관리하는 장애인 수용시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6.7.26.

노동자의 일상을 파괴한 갑을자본의 노조파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갑을오토텍 공장이 지난 7월 26일 직장폐쇄에 돌입한지 어느덧 100일이 넘었다. 이번 직장폐쇄는 지난해 노조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 박효상의 구속이 확정된 직후 벌어진 일이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갑을오토텍은 지난해 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특전사, 경찰 출신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제2 노동조합을 만들고, 기존 노조 조합원들과 분쟁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40여명이 폭력으로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이 모든 일들이 갑을오토텍의 노조 파괴 계획인 일명 'Q-P 전략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회사의 바람과 달리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 조합원들은 흔들리지 않고 단결하며 투쟁하고 있다. 조합원 가족들 또한, 전국 곳곳을 누비며 갑을오토텍 자본의 실체를 알리고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 내는 데 앞장서면서 이 싸움을 함께 만들고 있다.



2016.7.28.

헌재, 동성애 처벌법 합헌 선고

헌법재판소는 “동성애처벌법”, “한국판 소도미법”이라 불리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하여 3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5년 11월, 유엔자유권위원회는 이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하면서 1년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보고하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선언하며 폐지의 기회를 놓쳤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합헌 결정을 규탄하고, 국회가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며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까지 1만인 입법청원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6.8.20.

단원고 기억교실 이전하던 날

8월 19일, 단원고 운동장에서는 ‘기억과 약속의 밤’ 전야제가 열렸다. 20일 시작되는 416기억교실의 이전을 앞둔 무거운 밤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또다른 현장이기도 했던 단원고 교실은 이틀에 걸쳐 안산교육지원청으로 이전되었다. 참사 3주기까지 보존 복구될 예정이나 빈 교실을 채웠던 희생자들의 목소리와 살아남은 이들의 비통함까지 복구될 수는 없을 것이다.

참사를 온전히 기억하는 경험을 가져보지 못한 한국사회에서 단원고 교실 문제는 유가족과 재학생 부모의 갈등인 것처럼 부각되었다. 2월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재학생 학부모들이 저지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결국 단원고 교실을 이전한다는 협약식(5.9.)을 가졌으나 세월호 희생 학생을 제적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유가족들이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을 해제(5.14.)한 후 8월 방학 기간을 빌어 이전이 이루어졌다.

기억할 권리, 기억될 권리. 한국사회는 과연 기억하는 방법을 익혀가고 있는가. 적어도 기억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점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2016.8.21.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3권 쟁취!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올해로 12년이 되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노동3권을 보장하고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제도라고 선전하지만, 실상은 착취만 강화하고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 사실상의 강제노동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의 이해에 따라 개악되어 왔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제한되고, 퇴직금도 ‘출국 후’에 지급되고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재고용도 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부당한 강요를 거부하지 못하고 감내하는 실정이다.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노동 단체들은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인권과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라고 지금까지 요구해 왔다. 2016년 8월 21일 서울, 대구, 부산 등지에서 수백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연대단위와 함께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3권 쟁취!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힘차게 투쟁했다.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이주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퇴직금 국내에서 지급하라!
농축산/어업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8조 폐지하라!
이주노동자 체류기간 연장 보장하라!
반인권적 강제단속 중단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 폐지하라!
한국정부는 인종차별 정책 중단하라!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 3권 쟁취!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8/21 (일) 오후 3시

수도권
장소 : 보신각 광장
주최 :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동대위, 이주노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부산·울산·경남
장소 : 부산역
주최 :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대책위

대구·경북
장소 : 2.28 공원
주최 :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2016.8.26.

290여일의 싸움 끝에 받은 사과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건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이 말 한마디가 몰고 온 파장은 엄청났다.

바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이다. 3590여일을 넘게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기타노동자들을 겨냥한 저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 콜트약기 방종운 지회장은 초인적인 단식을 진행했다. 또한 수많은 시민들이 동조단식을 이어갔고, 여의도라는 삭막한 공간에서 290여 일간 싸운 끝에 김무성 대표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국회 정론관에서 30여 분간 진행된 사과 기자회견, 기자회견 내내 빼딱한 모습을 보인 김무성 대표는 회견이 끝나자마자 도망을 쳐버렸다.

수많은 연대가 만들어준 값진 승리의 경험이다. 국내 최장기 투쟁사업장인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은 사과 기자회견이 끝나자 또다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여전히 현 새누리당 대표의 사과를 받기 위해 그리고 원직 복직을 위해!



2016.8.31.

복지 사각지대의 주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안 발의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시행 1년, 정부는 소위 “송파 세모녀 법”이라 말하며 이를 홍보해왔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존재하는 한 복지의 사각지대는 줄어들지 않는다. 실제 부양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때 연락을 한 번 했다는 이유로 딸이 부양의무자로 간주되어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부양가족이 있고 소득이 어느정도 이상이라는 이유로 수급비가 삭감되어왔다. 이에 지난 8월 31일 부양의무자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더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가족과 개인에게 넘겨지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정안을 통해) 제대로 된 인간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권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2016.9.2.

국가인권위원 인선절차 1년 소요

9월 2일 국회 추천 몫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김기중 변호사가 선출되었다. 이번 인권위원 선출은 19대 국회를 넘겨 20대 국회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임자 강명득 비상임위원의 임기가 끝난 지 무려 1년이 지난 후였다. 또한 이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은 법률가 8명, 종교인 2명, 정치인 1명으로 되어 다양성이 심각하게 불균형한 상태가 지속됐다.



2016.9.6.

청와대 앞에서 장애인 인권을 외치다

9월 2일 장애인 관련 예산이 처참히 삭감된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장애인들은 ‘2017년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쟁취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결성했고, 9월 6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보장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렸다. 현수막은 경찰에 의해 10분여 만에 철거되었지만, 소식이 전해져 곳곳에서 연대의 발걸음이 잇따랐으며, 많은 사람의 힘으로 현수막은 다시 건물 옥상에 설치됐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이러한 목소리에도 정부안은 수정되지 않은 채 결국 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공동행동은 9월 12일 대형 현수막을 철거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특별위원회의는 장애인 생존권과 존엄성 보장을 위해 책임 있고 실질적인 예산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2016.9.8.

국가인권위원회,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권고

2008년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외국인이 HIV검사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은 현행법 상으로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마약, 에이즈검사 포함)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이 문제를 ‘인종차별’로 규정하고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와 2012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2015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외국인 회화지도 교사에 한정해 의무적으로 HIV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공중보건이나 그 밖의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다시 권고를 한 것이다. 모든 회화지도 비자 외국인에게 에이즈 검진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검열과 색출을 위한 차별적인 정책이고, 에이즈 예방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엔은 ‘가짜 안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국경이 안전할수록 자국민을 에이즈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잘못된 환상을 깨고, 모든 외국인과 이주노동자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감염인 외국인에

게는 차별없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 국내이행절차 마련 권고

2016.9.10.

2016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KOREA 저항행동

9월에 열린 2016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KOREA(DEFENSE EXPO KOREA 2016)에 저항하기 위해 20여명의 평화단체 활동가 및 시민이 모였다. 'WAR STARTS HERE'(전쟁은 여기서 시작된다) 구호를 외치며, 행사장 앞에서 퍼포먼스와 피켓 시위를 했다. 무기거래에 반대하는 저항행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9월 한달 동안 진행되었다. 2017년에는 DX KOREA보다 규모가 더 큰 서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가 열린다. 죽음의 무기를 팔고 사는 현장을 고발하고, 전쟁장사를 멈추기 위한 저항행동은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2016.9.12.

위험하다고 느낄 때 안전할 권리는 어디에

- 경주 지진 사태

9월 12일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연달아 발생한 강진으로 울산 현대자동차에서는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물건이 떨어지고, 빔이 휘어졌다.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노동조합은 회사에 조업을 멈추고 현장안전점검을 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생산가동에 문제가 없으니,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이었다.

지진 발생 당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던 고등학생들은 밖으로 나가야 하는게 아닌지 불안했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을 진정시키고 ‘야자’를 강행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주변 위험물을 보기 어려운 시각 장애인이나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지체장애인, 환자나 노인들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국가에서 만든 매뉴얼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우리 사회에서 ‘안전할 권리’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 하루였다.



2016.9.16.

유해물질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다

올해 제 3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2015년 10월 한국 방문 당시 조사했던 유해물질 피해 문제와 이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옥시 가슴기 살균제 피해,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직업병 문제, 그리고 당진 화력 발전소, 고리 원자력발전소 및 보령 공군기지 인근 주민 피해 등이 언급되었다. 특별보고관은 옥시레킷벤키저에게 모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 등을 권고했다. 삼성전자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해 조정 위원회가 권고하는 최소한도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최근에 설립된 옴부즈만 위원회와 적극 협조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직접 제네바에 가서 기자회견, 야외 퍼포먼스, 토론회 및 사진전시를 통해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등 많은 동북아 국가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리고 정부와 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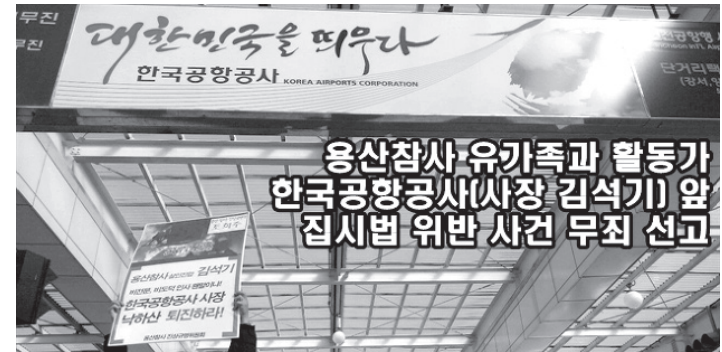
2016.9.22.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출근저지 투쟁 참가자 연행사건, 집시법·업무방해 모두 무죄판결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었던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2013년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강제 연행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해산명령 불응)과 업무방해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진행된 집회시위가 ‘신고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집회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해산명령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이탈한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해산명령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한 피켓시위를 업무방해로 판결한 원심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경찰은 용산 참사 당시 모습과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로 검경의 과잉 대응과 기소권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



2016.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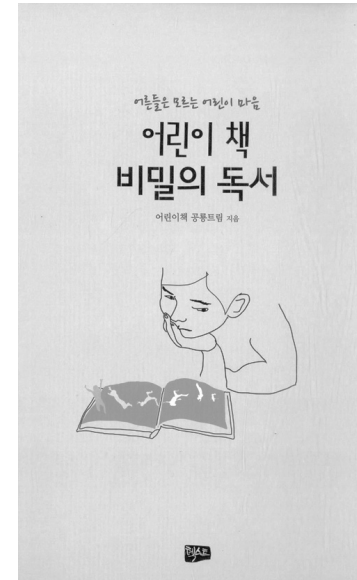
**어린이 책을 통해 본 어린이 인권,
『어린이 책 비밀의 독서』 출간**

『어린이 책 비밀의 독서-어른들은 모르는 어린이 마음』(어린이 책 공룡트립 지음, 텍스트, 2016)

‘어린이 책’은 무엇일까? 어린이가 읽어야 하는 책일까 아니면 어린이의 현재 삶을 그린 책일까? 그것도 아니면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은 책일까?

<어린이 책 공룡트립>은 어린이 책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한 어린이 책 읽기 모임으로 그림책과 어린이를 독자층으로 발간한 책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그리고 어린이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읽어보려 했다. 그리고 새로운 질문과 만난다. 왜 어린이 책인데 정작 책을 쓰고 ‘좋은 어린이 책’ 선정은 어른들이 하는 걸까? 어린이 책 속 현실은 왜 늘 무지개빛이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가는 건 ‘좋은 어른’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함께 고민하며 나눈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기 위해 2010년부터 <인권오름>에 연재해 왔고, 올 해 한권의 책으로 묶어냈다.



2016.9.25.

317일간의 사투 끝에 백남기 농민 사망, “이제 싸움의 시작”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317일 간의 사투 끝에 영면에 드셨다. 사과 한 마디 없던 국가는 부검을 하겠다며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다시 모욕했다. 위독하다는 사실을 먼저 안 경찰은 서울대병원으로 병력을 배치하였고 부검을 주장하였다. 유가족은 경찰이 아버지 몸에 손을 대게 할 수 없다며 부검 반대 의사를 밝혔고, 백남기 투쟁본부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매일 촛불집회를 개최하며 경찰의 강제집행을 막았다. 많은 시민들이 장례식장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았다.

검경이 청구한 영장은 한 차례 기각되었으나 재청구 이후 서울중앙지법(성창호 판사)이 ‘조건부 영장’을 발부(9.28.)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 백선하(서울대병원 신경외과)가 사망진단서 지침을 무시한 채 ‘병사’라고 기재한 사실이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차차 경찰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청문회에서 ‘없다’, ‘파기했다’며 부인했던 ‘집회상황 속보’가 공개되어(10.19) 경찰 지휘체계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음이 확인되었다. 경찰의 책임이 드러날수록 검경은 ‘빨간 우의’ 등 유언비어를 내세우며 발뺌하기에만 급급했지만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으

로 내몰렸다.

영장 만료일(10.25)까지 시민들은 백남기 농민을 지켜냈다. 그의 딸 백도라지씨는 장례를 치르기로 하면서 “이제 싸움의 시작”이라고 힘 주어 말했다. 백남기 농민은 11월 5일 발인하여 광화문광장에서 영결식을 가진 후 고향으로 돌아갔다. 쓰러진 지 1년이 되는 11월 14일에는 백남기투쟁본부와 인권단체들이 ‘물대포 추방’을 선포하고, ‘백남기-한상균’ 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책임자 처벌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2016.9.26.

시설범죄로 얼룩진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 폐쇄

서울시 도봉구는 온갖 범죄로 얼룩진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을 2016년 12월 3일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탈시설운동 활동가와 법률 전문가의 끈질긴 운동과 서울시와 도봉구의 폐쇄 결심 그리고 송전원 이용인의 요구로 이뤄낸 일이다. 특히 발달 장애인 당사자인 송전원 이용인들은 서울시복지재단 건물을 직접 찾아가 탈시설 후 지역사회서 생활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 제공 등 지역사회 서비스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는 송전원 폐쇄 사건을 계기로 이 사회에서 고립과 소외를 상징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이 해체되고,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지역사회서 함께 사는 날로 이행해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



2016.9.26.

15년간 다닌 병원에서 진료거부 당한 HIV/AIDS 감염인, 인권위 진정

세브란스병원에서 HIV감염인에게 신장투석을 거부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두 차례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는 2001년 HIV확진을 받은 후 지금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에이즈치료를 받아왔다. 만성신부전증 때문에 신장 투석을 받아야 했던 피해자는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다른 환자들때문에 HIV감염인에게 신장투석을 하기가 어렵다”, “HIV감염인에게 신장투석하려면 투석기계를 새로 구입해야하고 그에 따른 인력도 채용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할 것을 요구 받았다. 15년 넘게 다니던 병원으로부터 내쳐진 피해자는 절망과 모욕감을 느꼈고, 결국 용기를 내어 이러한 대형병원의 차별행위를 인권위에 진정한 것이다. 한편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을 비롯한 병원들의 진료거부행위에 대한 감염인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의 결과로 올해 서울시는 전 시립병원에 적용할 ‘HIV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6.9.27.

불법 정부의 불법 성과·퇴출제에 맞선 공공부문 총파업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 서울대병원, 연금, 가스 등 공공 부문 노조는 정부의 불법 성과·퇴출제 도입을 반대하며 9.27. 무기한 공동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모든 교섭권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함께 갔다 함께 온다”는 기조로 15개 노조, 6만여 조합원들이 동시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를 향해 성과·퇴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고, 대정부 교섭 등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무시로 일관했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성과연봉제를 저성과자 해고 및 퇴출제로 규정, 사실상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불법이사회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도 어기고 성과·퇴출제를 강행하는 불법정부에 맞선 파업이라는 의미도 컸다. “성과·퇴출제는 민영화, 국민피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전국민에게 파업 지지를 호소한 공공부문 파업투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2016.9.28.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1500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역 지하 농성 1500일을 맞이하며, 2박 3일 투쟁캠프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캠프단원들은 9월 28일 정부서울청사를 출발, 원내정당 당사들을 방문하여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는 장애인의 복지서비스와 빈곤층의 최소 생계비 지급을 ‘예산부족’의 논리로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요되는 한 줌의 예산이 그리도 아까운 모양이다. 사람의 목숨은 돈으로 썰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도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하여 광화문역 농성은 계속 될 것이다.



2016.9.29.

경찰의 집회 채증사진의 증거능력 더 엄격하게 따져야!

2013년 5월 1일 서울광장에서 노동절 기념집회에 참석한 후 집회 참가자 1500명과 함께 프라자호텔 앞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참가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채증 사진이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재판과정에서 누가 촬영했는지도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진파일이 실제 촬영일시와 동일한지 여부는 알 수 없고, 디지털 파일은 편집프로그램에 의해 흔적 없이 편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채증사진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로”라며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에서 무분별한 채증은 심각하다. 그렇게 수집된 채증자료중 도로에 있는 사진 몇장만 제출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너무 쉽게 인정되어 왔다. 이번 사건은 이런 채증사진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6.10.1.

900일의 외침, 진실의 끝은 우리가 정한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을 위법하게 해석하여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이 올해 6월 30일(보고서 작성 기간 포함 9월 30일)이라고 주장해왔다. 19대 국회는 정부의 억지에 맞서지 못하고 특조위 활동 보장의 과제를 20대 국회로 넘겼다. 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의원들이 상당수 당선되었지만 20대 국회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다시 유가족과 시민들이 나서야 했다.

정부청사 앞 노숙농성(6.25~7.2), 세월호 특조위 단식농성(7.27~10.1),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8.18~9.6), 더불어민주당사 점거농성(8.25~31) 등이 숨가쁘게 이어졌고, 많은 시민들이 동조 단식 등으로 힘을 모았다. 그러나 정부는 끝내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 해산했다. 다음날인 10월 1일은 세월호 참사 900일이 되는 날이었다. 광화문416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특조위 강제 해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으로 끝까지 진상규명할 것을 선언했다. 그 후 국민조사위 구성, 제2의 특별법 제정 등 진상규명을 이어가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2016.10.4.

가습기 살균제 특별위원회, 해결해야 할 과제들만 확인

지난 6월 27일 여야 3당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후 정부부처와 관련 기업 조사 및 청문회 그리고 보고서 채택까지 90일의 활동이 일단락됐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 제2의 가습기 살균제를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웠던 특위는 지난 9월 영국의 옥시레킷벤키저를 방문해 사태 책임을 인정받고 공식 사과를 끌어 내는 등 진상 규명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다. 반면, 피해자 구제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재발 방지 대책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지난 11월 15일, 세류 제품을 사용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 가족 10명이 기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되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 재구성하여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2016.10.5.

한국판 소도미법! 동성애 처벌법!

균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선언운동

2016년 10월 5일. 성소수자 인권단체, 성폭력상담 전문 단체, 공익 법률 단체, 대학 성소수자모임 연단체 등이 모여 균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선언운동에 돌입했다. 작년 11월 5일 유엔자유권위원회에서는 균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한국정부에 권고했고 올해 안으로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보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관련 단체들은 유엔자유권위원회가 명시한 1년의 기한이 한 달이 남은 10월 5일, 균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원하는 1만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까지 두 달 동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 지역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1만 명의 뜻을 담기로 했다.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부산, 대구, 대전 등 주요 지역을 돌며 진행된 캠페인에서 11월 현재 9천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균형법상 '추행'죄 폐지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시민이 입법청원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헌법재판소는 또 다시 '추행'죄에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일반 시민들은 한국에 동성애 처벌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놀라고 있는 현실이다. 19대 국회 때 폐지안을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법안은 묻혔다. 20대 국회에서는 시

민들이 먼저 균형법상 '추행'죄 폐지안 발의를 요청해야 국회가 움직일 수 있겠다는 판단에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좀 먹는 균형법상 '추행'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아직 서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여기로.

서명: <http://goo.gl/1hlGSZ>



2016.10.5.

노숙인도 생활임금을!

올해 홈리스 추모제 노동분야 투쟁 목표는 '생활임금 쟁취'로 정해졌다. 지난 10월 5일, 서울시는 2017년 생활임금을 8,197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내년 최저임금 6,470원 보다 1,727원이 높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노숙인 일자리 사업 중 노동능력이 미약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특별자활근로의 경우 올해 임금으로 시급 6,030원이 적용되었다. 생활임금은 7,145원인데 말이다. 만약 하루 5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15일을 일하면 452,250원이다. 방세 25만원 내고 나면 절반도 남지 않는 금액이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발표해 놓고 적용이 가장 필요한 대상은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2016.1.12.

반올림 노숙농성 1년, 이제 삼성이 답하라!

반올림은 삼성전자 반도체, LCD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며 작년 10월 7일부터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1년 넘도록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현재 반올림에 제보해온 직업병 피해자만 224명, 사망한 노동자만 76명에 이른다. 직업병 피해자들은 지금도 백혈병을 비롯해 뇌종양, 유방암, 다발성경화증 등 수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삼성은 지난해 10월 반올림과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묻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회장은 지난 10월 27일 삼성 등기 이사로 선임되었고, 비선 실세 논란을 빚고 있는 최순실에게 200억을 갖다 바쳤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반올림은 현재 직업병 문제 해결 촉구와 함께 비리로 얼룩진 삼성 일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2016.10.17.

20년만에 열린 “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 도시 유엔회의”

지난 10월 17일~20일, 20년마다 개최되는 해비타트Ⅲ(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한 유엔 회의)가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되었다. 20년 전, 한국의 주거운동 단체들과 철거지역 주민조직들이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참여했던 것처럼, 이번 3차 회의에도 “해비타트Ⅲ 한국민간위원회”를 구성해 참가했다.

‘주거권’을 넘어 ‘도시에 대한 권리’를 논의하는 이번 회의에 한국정부의 대표단은 한국의 도시화를 홍보하고, IT기술에 기반한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선전하는 세일즈에만 치중해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반면 주거운동 단체들을 비롯한 한국 민간위는 한국의 급속한 자본주의적 도시화의 폐해를 비판하고, 대안포럼인 민중사회포럼에 참여해 강제퇴거 국제법정에 함께했다. 또한 아시아 주거포럼을 개최하고, 퇴거위기의 마을들을 지지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과의 공식 면담을 성사시켜, 한국의 홈리스와 빈곤, 청년주거, 강제퇴거 등의 이슈를 전하고 한국방문을 촉구해, 2017년 봄 방한의 약속을 받기도 했다. 특히 본 행사장 내에서 강제퇴거 국제법정에 참여하기 위해 온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생명평화의 100배를 올리는 직접행동은 경찰을 당혹하게 하고 세계시민사회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주거권이나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현도 각국 정부들의 고위급 테이블에서가 아닌 우리의 힘과 행동으로 가능할 것이다.



2016.10.18.

병역거부 항소심 최초 무죄 판결

작년부터 이어져온 병역거부 무죄판결이 올해에도 계속되었다. 2016년 6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8월 청주지법에서, 그리고 10월엔 광주지법 항소부에서 각각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특히 광주지법은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최초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판결문들의 내용도 이전보다 훨씬 진일보되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동안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것을 반성하기도 하고,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논거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도 볼 수 있었다. 군대 가서 총을 드는 것만이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군대 가지 않는 사람도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을 다하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심지어 평화운동 또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평화운동이 줄곧 안보를 군사적 영역에만 가두지 말라고 주장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법부에서 평화운동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다.



2016.10.20.

낙태죄 폐지 운동, 검은 옷의 행렬로

9월 22일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상의 허용한계를 벗어나는 인공임신중절 시술 의사에게 최대 12개월까지 자격 정지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10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2일부터 전면적인 시술 중단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국면은 정부 대 의사회의 갈등으로 그려지는 듯했으나, 임신중절의 핵심적인 당사자 주체는 다름 아닌 여성들이다. 여성들은 정부와 의사회 모두를 비판하며 “진짜 문제는 ‘낙태죄’”라는 주장을 걸고 거리로 나섰다. 사회적으로는 생명과 삶을 제대로 책임 지지 않으면서, 여성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통해 인구 재생산을 관리하려는 국가에 대해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시위는 한국 뿐 아니라 폴란드,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등 세계 각지에서 벌어졌던 ‘검은 시위’의 맥락에서 세계적인 연대로 이어지기도 했다. 10월 한 달 동안 ‘낙태죄 폐지’ 요구는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1인시위, 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었으며 대전, 대구, 전북,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갔다. 검은 시위의 행진은 ‘낙태죄’ 폐지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시작되었음을

널리 알리는 선포이자, 더 이상 국가에 의해 통제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선언이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11월 11일 최종안을 발표하며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싸움은 시작된 터, 이제 이 투쟁은 성적 통제를 통한 국가 주도의 인구재생산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대될 것이며, 장애차별적이고 우생학적인 모자보건법 상의 허용 한계 개정, 형법 상 ‘낙태죄’ 폐지가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6.10.22.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한국반빈곤영화제 첫 개최

빈곤사회연대가 주관하고 빈곤철폐의날조직위가 주최하는 제 1회 한국반빈곤영화제(KSPFF)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었다.

제 1회 한국반빈곤영화제는 <사람이 산다>라는 슬로건 아래, 영상을 통해 빈곤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보여주었다. 많은 한국 영화들 속에서 빈곤은 하나의 소재로만 사용되면서 오히려 빈곤한 사람들의 현실은 영화 속에서 가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 이에 반빈곤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당사자의 눈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현실과 싸우는 빈곤 당사자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담은 영화들을 소개했다. 특히 당사자인 관객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입체적인 GV(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되었다는 평이다.



2016.10.28.

**삼례 3인조,
17년만에 누명을 털어내다.**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북 완주군의 한 슈퍼에 강도가 침입해 주인을 살해한 이른바 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누명을 쓴 피해자들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구타를 하는 등 인권침해 수사를 했고, 허위자백을 받았다. 사건 발생 1년 만에 부산에서 진범이 잡혔고 이들의 자백이 사건 정황과 맞았지만 검찰은 진범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결국 누명을 쓴 3인조는 허위자백을 근거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17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고통 받고 있던 이들의 사건에 대해 박준영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지원으로 재심이 시작되었다. 결국 전주지법은 이들에게 무죄판결을 했다. 누명의 피해자들은 물론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도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국가폭력에 의해 긴 시간 동안 고통 받은 이들에 대한 치유와 피해보상, 재발방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6.10.29.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아우성이 합성이 된 '조선 하청노동자 대행진'

10월 29일, 조선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연대의 발걸음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노동자만 해고하면 구조조정인가? 하청 노동자들은 업체폐업으로 해고 당하고 구조조정 당하는데 사측은 하청 노동자들의 해고를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언제나 필요하면 해고해도 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이다. 1천 명의 노동자들은 거제에서 외쳤다. '조선소 구조조정 중단하라' '하청노동자 고용을 보장하라' '원청이 책임져라' '다단계 하청구조 폐지하라' '노동조합 건설하자'. 사측은 조선하청노동자대행진에 노동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야유회와 회식을 했고, 참가자가 있으면 업체를 폐업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그 날 우리는 모였고 4,590명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고용 안정호'를 앞세우고 대행진을 했다. 그 날은 거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권리를 외친 날이다.



2016.11.3.

**129명의 죽음,
대구시립희망원은 ‘조용한 학살’을 멈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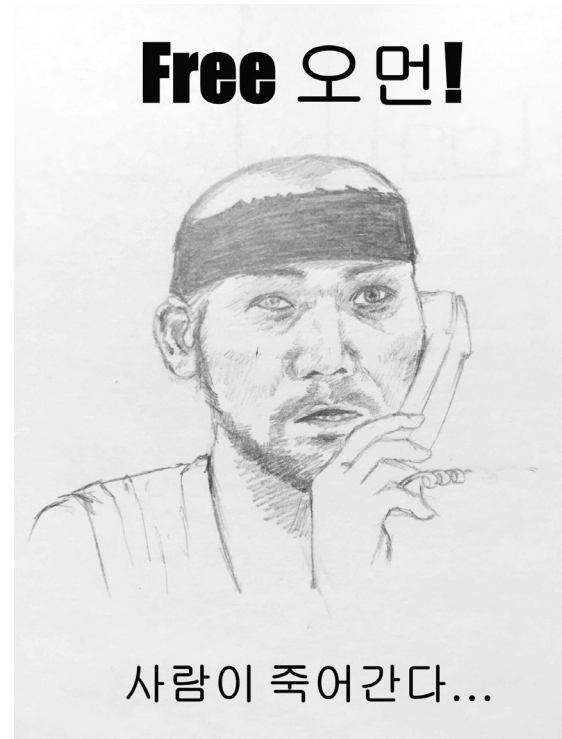
2016년 11월 3일, 전국 장애계는 2012년부터 2년 반동안 129명이 사망한 대구시립희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보호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으로 삶을 마감한 129명을 추모하고, 대구시립희망원을 위탁 운영한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시설 운영권 반납과 대구시의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요구한 이날 집회는 500여명의 참여로 대구 계산 성당 앞에서 진행되었다.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의 이름도 없이, 죽은 사람의 숫자만 남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조용한 학살. 장애인거주시설을 지속시키는 침묵의 카트텔. 우리는 학살의 역사를 잇는 세상을 승인할 수 없기에 새로운 날을 기다리며 저항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2016.11.9.

목숨을 건 단식과 자살기도까지 했던 오먼씨를 법무부가 강제추방한 날

한국에서 일을 하다 얻은 실명의 치료와 산재보상 등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단식 중이던 오먼(39세, 우즈베키스탄)씨가 법무부에 의해 결국 강제 송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 따르면 지난 11월 9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무관이 파견되어 오먼 씨를 본국으로 압송하였다고 한다. 이는 오먼씨가 경기이주공대위 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계속 알리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 한 사실 등이 언론에서 보도되자 이를 문제 삼은 정부의 보복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화성보호소내 장기 구금된 다른 이주노동자들 마저도 본인들의 문제해결과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강제추방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2016.11.11.

포기하지 않은 죄, '파산 콘서트'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상사건. 모두 범인으로 지목된 이들이 사실은 경찰의 가혹행위에 의해 누명을 쓴 피해자였음이 밝혀진 사건들이다. 박준영 변호사는 하나같이 '돈 안되는' 이 사건들을 개인 파산까지 무릅쓰며 재심을 이끌었고 무죄 판결까지 받아냈다. 박상규 전 오마이뉴스 기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해자들의 이야기와 재판 과정을 글로 세상에 알렸다. 바로 다음 스토리펀딩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시민들은 억울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삶에 공명했고 5억이 넘는 돈이 모금되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힘없고 자기 변론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단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소중한 생의 수년간을 감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인권의 보루여야 할 사법체계에 의해 오히려 삶과 인권이 파괴된 이들의 이야기는 이 사회 인권의 사각지대에 대한 인권운동의 관심과 자성을 다시금 촉구한다. 박준영 변호사와 박상규 기자 그리고 지역 인권단체들은 피해자들의 이야기와 사법권력의 부당함을 알리고 후원해준 시민들에게 화답하는 의미에서 11월 11일부터 '파산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12월 17일까지 전국 5

개 도시를 순회하며 열린다.



2016.11.11.

세월호 인양, 거짓말의 연속

해양수산부가 올해 안 세월호 인양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이면 인양이 완료 된다고 말해왔다. 3월 들어 유실방지를 위한 사각펜스를 설치한 후 인양의 첫 관문이라 할 ‘선수들기’가 7월 29일 겨우 성공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들에 대비하지 않은 채 실수를 연발하다 늦어진 것이다. 게다가 온전한 인양을 약속했던 정부는 인양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이미 120여 곳에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 인양 후 선체를 절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8.29.)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팽목항에서, 유가족들은 동거차도에서 온전하고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며 기다려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의 해상기도법회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거짓말의 연속이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애절한 기다림은 여전히 끝을 가늠하기 어렵고, 진상 규명의 중요한 근거인 세월호는 이미 바다 속에서 훼손되고 있다.



2016.11.12.

박근혜는 하야하라! 거리를 메운 주권자의 함성

최순실의 태블릿 PC에서 대통령의 연설문 다수가 발견되면서 우병우와 미르·K스포츠재단 등으로 이어지던 각종 의혹에 불이 붙었다. 국회에서 ‘개헌’ 카드를 던지며 주도권을 되찾으려던 박근혜의 다음날 대국민담화(10.25)는 불난 곳에 기름을 부었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박근혜 하야와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고 눈치만 살피던 정치인들도 차츰 박근혜 퇴진 운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11월 12일 민중총궐기와 이보다 앞서 긴급하게 결성된 퇴진행동(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주최의 집회와 행진까지, 100만 명이 도심을 가득 채우고 주권자의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인권활동가들은 평등한 광장, 세상을 뒤흔들 광장을 바라는 작은 목소리들을 모아 신문광고를 내기도 했다.

거리의 함성은 박근혜가 온갖 비리와 실정의 몸통이라는 데에 그치지 않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시스템 전체를 문제 삼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이 길의 끝이 어떤 결말을 보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막장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사실들이 연일 폭로되고 있지만 먼훗날 기억되는 것은 역사를 써나가는 민중의 도도한 물결일 것이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세우

기 위한 저항의 역사가 바로 인권의 역사다.



2016.11.13.

사상 최장기 철도파업은 오늘날의 전태일정신

철도노조의 파업이 (11월 15일 현재) 50일을 넘기고 있다. 2013년 전국민이 “안녕들하십니까”로 화답했던 23일 간의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을 훨씬 넘어서는 역대 최장기간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올해 9월 27일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 달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와 공사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빔나갔다. 장기화되는 파업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기세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철도노조는 올해의 전태일상을 수상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오늘날의 투쟁으로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에서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의 불법 성과·퇴출제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6.11.19.

**청소년이 바라는 세상:
'청소년대통령' 대국민담화문 발표**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에서는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향상시키고 사회와 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10월부터 “내가 만약 최초의 청소년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는 이름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천여 명의 10대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싶은 만큼!” 시험 축소와 입시교육 폐지 △“8시간 이상 강제학습은 아동학대!” 학습시간 축소 △“먹고 살 걱정 없이” 모든 이에게 기본소득 △“사람은 일회용품이 아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뭐가 무서워 숨기냐?” 세월호 진상규명 등에 높은 지지를 보였다. 또한 청소년에게 선거권/피선거권이 보장된다면 대통령을 포함한 나라 전체가 바뀔 것이다, 입시전쟁이 끝날 것이다, 청소년을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부터 달라질 것이다 등과 같은 응답을 보내주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11월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청소년대통령'이 청소년들의 요구와 그 의미를 알리는 대국민담화문의 형태로 발표됐다.



2016.11.23.

예비군 훈련 거부 선언 기자회견

예비군 훈련 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기자회견이 11월 23일에 열렸다. 그동안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호와의증인이었고, 평화주의 신념으로 예비군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지만, 기자회견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이들은 김형수, 조성현, 이상 님이다. 예비군 훈련 거부는 병역거부와 달리, 처벌을 받아도 해당 훈련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반복 처벌을 받고 처벌 받을 때마다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다. 예비군 소집 기간이 끝날 때까지 수십 번 경찰조사와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내고 때로는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기도 한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이다.



2016 프로젝트 그날들

인권운동은 연말마다 한국의 인권현실을 비춰볼 수 있는 사건들을 선정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1993년부터 시작된 '인권10대뉴스'는 문민정부 첫해의 허상을 깨고 '한국 인권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지표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그 후 '정권교체'라 불리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를 거치며 한국의 인권의 지형은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은 더욱 대중적인 말이 되었으나 구조적인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우리들의 삶은 더욱 팍진해지면서 껍데기만 남은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 그날들>은 박근혜 정권 첫해 인권의 참상과 저항을 기록으로 남기며, '놓치지 말아야 할 인권의 장면들'을 통해 한국의 인권현실을 두루 헤아려보는 기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함께 만든 사람들 — 4.16연대,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건강과대안 젠더건강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이주공대위,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수의 페미니스트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총궐기국가폭력조사단,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권리찾기 모임 '월담',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 비온뒤무지개재단,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 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옥바라지골목보존대책위원회,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기록활동네트워크 '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장,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재단법인 진실의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개인 연구자/활동가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철도노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 콜트콜텍기타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등을위한한표 레인보우보트,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의집 전국대책위,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해비타트Ⅲ 한국민간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홈리스행동, 희망을만드는법

후원 — 4.9통일평화재단

